


서 문

<청소년운동 우물 모임>은 ‘청소년운동이라는 한 우물만 파보자!’라는 생각으로 청소년운동에 대해 연구하고 정리하는 모임입니다. 2014년 1월 청소년활동가마당에서 나온 제안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4월 말 첫 모임을 가진 이래로 쭉 청소년운동을 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대상으로 탐구할 때 가장 처음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청소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물모임의 주제로 맨 처음 정해졌던 것은 ‘청소년운동의 정체성 찾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물모임에서는 4월 말부터 11월까지 청소년운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돌아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청소년운동이 무엇인지 토론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당시의 조사 중 청소년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청소년운동은 적대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탄압당하면서도 권리에 대한 열망을 발판으로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 작은 글 안에 그 과정을 세세하게 전부 넣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청소년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큰 지도를 그리는 것에 이 소책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책자에서는 운동의 논의나 주장, 운동론 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조직적인 운동들을 다뤘습니다. 문서 자료 등이 남지 않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실천과 활동들을 시대별로 추적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또한 운동의 큰 흐름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내부의 고민과 서로 다른 결의 입장들을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은 그 당시 활동했던 분들에게 다소 죄송스러운 일이며, 우리의 한계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이 소책자가 청소년운동을 알아가고 청소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운동 우물 우물

: 정체성과 역사 와썹염 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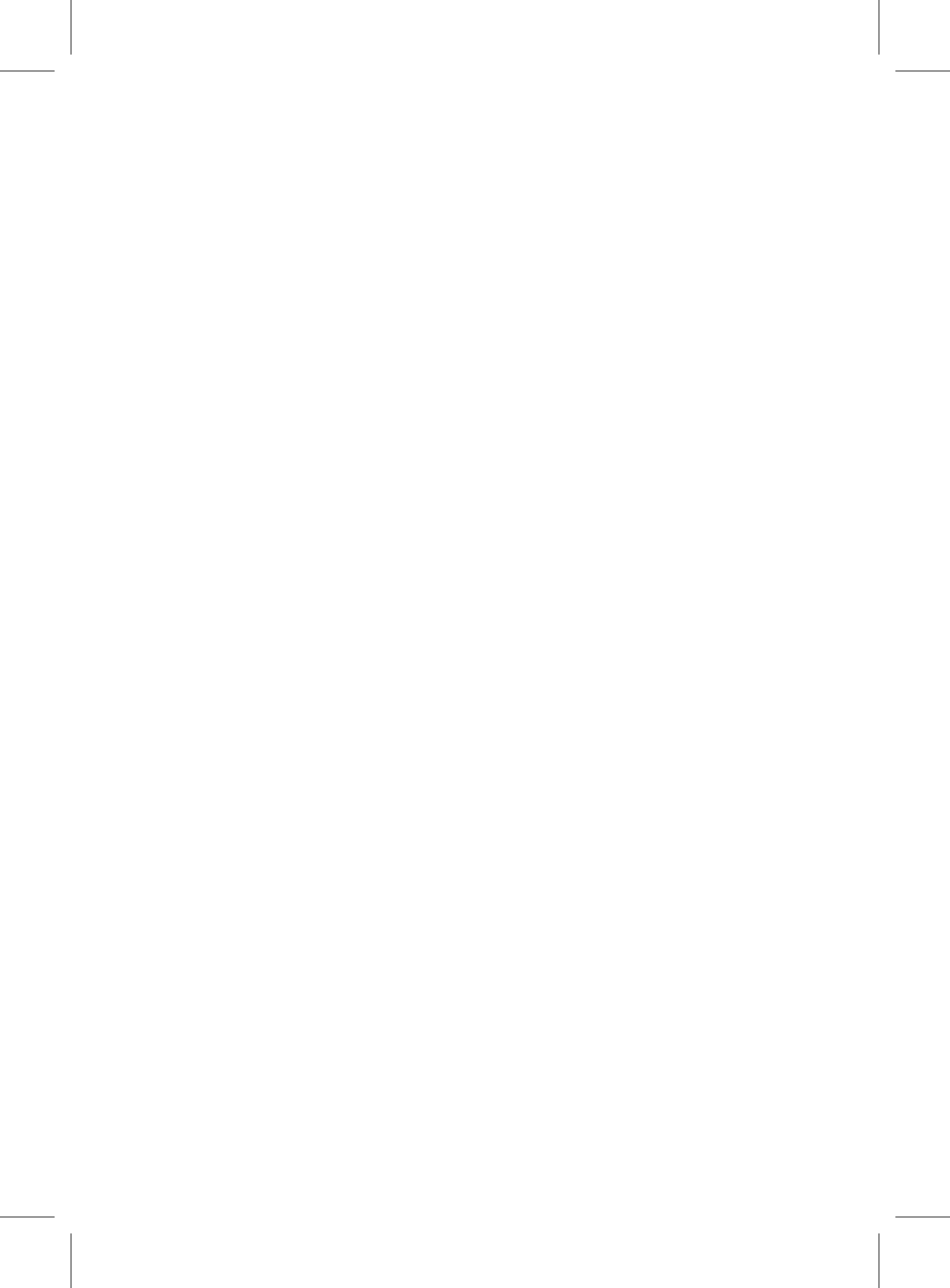
1. 청소년운동의 정체성, 역사 추적

보호냐 계몽이냐, 아니면 해방이냐 - 1920년대 ‘소년운동’	7
정치적 실천이면서 독자성 있는 운동 - 1980년대~1990년대 ‘고등학생운동’	13
‘어른들과 다른’ 청소년들의 목소리 - 1990년대 후반의 청소년운동	21
‘진보적’이라고 내세운 청소년운동 - 2000년대 초중반의 청소년운동	27
부록 2006년~2013년 청소년운동 역사	35

2. 청소년운동, 현재의 정체성 탐구

55	청소년운동의 ‘정치성’ 변화에 대하여
63	청소년운동 총론
73	우물모임 좌담회 : 청소년운동, 인권, 나이주의
85	부록 2015 청소년활동가 선언
89	참고 문헌

1. 청소년운동의
정체성, 역사 추적



보호냐
계몽이냐,
아니면
해방이냐

1920년대 ‘소년운동’

3.1운동 이후 시작된 ‘소년운동’

한국에서 최초로 청소년(아동)인 사람들의 이슈를 가지고 운동을 한 것을 꼽는다면, 거의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 1920년대를 보아야 한다. 1919년 3.1운동이 전국을 휩쓸고 난 뒤,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던 한국 땅에는 다양한 독립운동의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청소년, 당시 말로 ‘소년’에게 주목하는 운동들도 있었다. 우리는 먼저 당시의 ‘소년운동’이 청소년과 자기 운동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소년운동’은 지역에서 다양한 ‘소년회’, ‘독서회’ 등의 조직들이 생겨나고 여러 종교 단체들이 소년단체들을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 중에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도 있었고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계몽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도 있었다. 애국계몽운동,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으로서 소년운동이 확대된 측면도 있었다. 활동의 방식도 다양하여 동화나 동요 등 문화적인 활동도 있었고 청소년들이 사회과학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벌이고 시위를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들이 일어났다. 우리에게 익숙한 ‘어린이날’도 이때 시작된 것이고 방정환도 소년운동의 활동가 중 한 명이었다.

초반에는 지역의 자생적인 소년단체들, 그리고 종교단체가 만든 소년단체들이 소년

운동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상과 경향에 따른 소년운동 단체들이 생겨났다. 차츰 소년운동은 운동의 노선과 주도권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갈등을 빚게 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 일본제국주의의 탄압도 더 심해지는 한편, 소년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일본제국에 의한 아동 보호 및 관리 체제가 강화된다. 이러한 내외적 이유로 1930년대에 소년운동은 크게 약화된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다시 여러 청소년단체들이 생기고 청소년을 육성, 보호하자는 운동이나 어린이 문화 운동 등이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교육과 계몽과 보호의 대상, ‘소년’

당시 ‘소년운동’ 중에서 교과서 등에도 소개되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소년 수양’ 내지는 소위 애국계몽의 관점이다. 식민지배를 받게 된 것은 한국(조선) 민족의 실력이 부족하여 일어난 일이니, 국권회복과 독립을 위해서는 교육과 계몽을 통해 과학적 경제적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소년’은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빼앗긴, 옛날의 습관에 물들어 있는 노인들을 대신하여 나라의 주인이 될 희망이었다. 이러한 운동에 따라 학교들이 설립되었고, 단체들은 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키우게 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였다. 당시의 상황이 식민지배하였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청소년들에게 민족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논리 역시 노골적이었다.

가령 1900년대에 간행된 잡지 『소년』은 그 취지를 “신대한의 소년으로 깨달은 사람 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서 혼자 여가에 진 무거운 짐을 감당케 하도록 교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08년 결성된 <소년동지회> 역시 ‘소년의 책임’이라는 연설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들에 대해 대한매일신보는 “장래의 사회를 잘 인도할 자도 오직 우리 소년이니, 가히 사랑스럽다 소년이며, 또한 가히 두렵도다 소년이며. 이같이 멀고 소년의 책임이 이같이 중하거늘”이라는 논설을 게재했다.

이러한 관점은 1920년대 소년운동에도 이어지고 있다. 많은 소년운동 단체들은 청소년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선도하는 것을 자신들의 주된 역할 중 하나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거의 모든 소년단체들은 그 목표나 활동 내용 중에 청소년의 생활습관을 바르게 하고

덕성을 기르며 계몽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단적인 예로, 한국에서는 이 당시 처음 결성된 보이스카우트(<조선소년군>, <소년척후대> 등)는 종교적 색채도 강했지만 군사적 색채도 강했고 가입한 청소년들에게 몸가짐을 바르게 할 것이나 부모와 상급자에 대한 복종, 착한 일 하기와 덕성 수양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모임에서도 청소년들이 공부를 통해 지식을 기르고 민족의식 등을 가질 것을 강조하곤 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청소년들을 미래의 주인,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교육받고 준비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로 청소년들에게 민족과 사회의 현실을 교육하며 그들을 계몽하고 육성하는 활동을 했다. 그러한 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 역시 스스로 자신의 민족적 책임을 자각하고 동료 청소년들에게 이를 알리고 교육하는 활동을 하곤 했다.

같은 맥락에서 ‘소년 보호’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청소년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신체적 약자이며 순수한 존재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신문물이나 퇴폐적 풍조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학대에 노출되거나, 특히 어릴 때부터 임노동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관점은 사실 계몽운동가들과 일본제국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었다. 일본제국은 ‘아동보호사업’을 하겠다고 내세우며, 육아 사업, 아이를 학교에 보내자는 정책 등을 시행했다. 영양검사, 신체검사 등으로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우량아선발대회’를 여는 등 청소년들의 건강도 챙겼다. 물론 일본제국의 이러한 정책은 청소년들을 더 건강하고, 노동과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신체이자 인적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일본제국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을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일본식 식민지 교육을 받게 만들고 ‘황국신민’으로 의식화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므로 민족계몽운동과 일본제국의 ‘소년’에 대한 입장은 근본적으로 그들을 국가/민족을 위한 하나의 ‘인적 자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고 있었다. 다만 그것이 조선민족/한국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일본제국을 위한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민족주의 계몽운동의 소년은 교육과 수양을 통해서 ‘주체’가 되어야 할 존재였으나 이 주체는 그 할 일과 책임이 정해진, 민족을 위해 충성하고 애국해야 할 ‘주체’였다.

소년해방, 평등의 목소리

소년운동의 기초 조항

본 소년운동협회는 이 어린이날의 첫 기념되는 5월 1일인 오늘에 있어 고요히 생각하고 굳이 결심한 나머지 감히 아래와 같은 세 조건의 표방을 소리쳐 전하며 이에 대한 천하 형제의 심심한 주의와 공명과 또는 협동 실행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라.

- ①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락하게 하라.
- ②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 ③ 어린이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기 놀기에 족할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계해쫘亥(1923년) 5월 1일 조선소년운동협회

그러나 1920년대 소년운동이 단지 계몽운동이었다면 우리가 이를 살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 무렵에 한쪽에서는 분명하게 ‘해방’을 이야기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천도교 소년회>의 ‘어린이날 운동’이 그러했고, 다른 소년운동 중 일부에도 그런 성격이 있었다. ‘소년해방’이란, 청소년들의 삶의 조건, 어린이/소년이라는 존재가 받게 되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의 문제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을 운동의 목표로 삼은 것을 가리킨다. 인용한 조선소년운동협회의 「소년운동의 기초 조항」은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윤리적,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할 것을 운동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년운동의 기초 조항」 등이 나온 배경에는 천도교 사상이 있었다. 천도교는 교리상 아이들도 모두 같은 인간이자 ‘하늘’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고, 아이들에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리를 만들기도 했다. <천도교소년회>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역할을 없애고 청소년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며 어린이날 운동을 시작했다.

<천도교소년회>의 이론적 기둥이었던 소춘 김기전은 직접적으로, ‘소년보호’나 ‘소년 수양’이 아닌 ‘소년해방’이야말로 운동의 올바른 문제의식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한다.

"소년 문제를 운위하는 이에게 우리는 지금 민족으로 정치적 해방을 부르짖고 인간적으로 계급적 해방을 부르짖는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되 우리가 먼저 우리의 발밑에 있는 남녀 어린이를 해방치 아니하면 기타의 모든 해방운동을 사실로써 철저하지 못하리라 한다. (.....) 해방의 도는 그 끝에 어린이를 해방함에서 지어지리라고 한다. 혹 소년 문제를 말하는 사람 중에 해방 문제를 뒤에 두고 금일 이 현상 그대로의 위에서 소년 보호 문제를 말하고 소년 수양 문제를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틀린 생각이다. 가령 여기에 어떤 반석 밑에 눌린 풀씨가 있다하면 그 반을 그대로 두고 그 풀을 구한다는 말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말이다. 오늘 조선의 소년은 과연 눌린 풀이다. 누르는 그것을 제거치 아니하고 다른 문제를 운위한다 하면 그것은 모두 일시 일시의 고식책이 아니면 놀리어 있는 그 현상을 교묘하게 옹호하고자 하는 술책에 지나지 아니할 바이다."

(김기전, 「개벽운동과 합치되는 조선의 소년운동」, 1923.05.)


김기전은 “장유유서”, 즉 나이에 따라 서열을 짓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기존의 윤리적 관념에 도전했다. 요즘 말로 하면 청소년에 대한 나이주의에 반대한다고 한 셈이다. 김기전은 어린이도 어른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주장을 했으며, 그 상징적 의미로 어린이들에게도 모두 존댓말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상은 어린이날 선언이나 당시의 소년운동의 주장 등에 반영되었다. 김기전이 ‘소년해방’에서 정치적 해방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윤리적 해방만을 밝힌 것은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정치적 해방이란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는 것을 포함할 수밖에 없고, 일제의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이와 더불어, 1920년대 중반부터 커진 사회주의 ‘무산소년운동’은 빈곤한, 무산-노동자계급 청소년들의 삶의 현실을 전면에 부각시켰다. 이들은 스스로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자조와 함께 변혁을 주장했다. 이 운동은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을 사회주의 계급 혁명에

복무하도록 하기도 했지만, 청소년들을 한 명의 노동자이자 계급적 주체로 보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운동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비록 김기전 등의 활동가들이 ‘소년보호’나 ‘소년수양’과 ‘소년해방’ 사이의 긴장감과 거리감을 날카롭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운동에서 이는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다. 어린이날 운동은 “소년보호”의 기치를 걸고 행진을 하기도 했고, <천도교소년회>나 사회주의 소년운동도 청소년들을 계몽하고 교육시키는 것을 주요한 활동 내용으로 삼았다.

보호론과 계몽-육성론, 그리고 해방론은 서로 상당한 쟁점들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당시 이 문제는 활발하게 논쟁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운동이 막 싹을 틔운 초창기였기 때문이며, 일본제국의 탄압 때문에 노골적으로 성격을 드러내거나 활동하기 어려웠던 탓도 있다. 현실적으로도 청소년들을 의식화, 교육하고 폭력이나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소년해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교육이나 계몽, 보호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어떠한 보호인지, 그리고 청소년들을 어떤 존재로 파악하는지 그 관점일 것이다.

1920년대 당시, 청소년운동을 둘러싼 논의 내용들은 지금의 청소년운동과도 비슷한 면이 많다. 청소년을 약하고 보호할 대상으로 보느냐, 청소년을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거나 거기에 복무할 자원(‘주체’)으로 보느냐, 청소년을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으며 해방시켜야 할 존재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와 구도는 근대 초기부터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는 근대 청소년의 존재 조건에서부터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쟁점일지도 모른다. 

정치적
실천이면서
독자성
있는 운동

1980년대~1990년대 고등학생운동

민주화·통일·노동·참교육... 우리도 함께

1980년대의 '고등학생운동'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청소년운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등학생운동은 1985년 혹은 86년부터 그 움직임을 찾을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조직화된 것은 1987년이나 88년 이후로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외적으로는 1986년 교사들의 교육민주화 선언, 1987년 6월 혁명, 그리고 전반적인 민주화운동 혹은 대학생운동 등의 영향을 받았고 내적으로는 학생들의 사립학교에서의 투쟁이나 자생적 활동들로 주체가 형성되었다.

1980년대 중후반은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시기 중 하나였다.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있었고, 노동운동이나 민족주의·통일·반미운동 등도 활발하게 벌어졌다. 많은 고등학생운동 활동가들은 이런 사회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고 더 직접적으로는 교사나 가족 등과의 관계에서부터 운동을 접하게 되었다. 고등학생운동은 그 태생과 시작 경로에서부터 노동운동이나 민족운동, 민주화운동의 토양에서 자라났던 셈이다. 군사독재라는 그 시대의 조건도 하나의 선명하고도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이 시대에는, 비단 고등학생운동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들이 하나의 변혁운동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었으니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조건 덕분에 고등학생운동은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세력을 가질 수 있었다. 고등학생운동은 1987년 6월 혁명, 그리고 1989년을 계기로 크게 활성화되었다. 특히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창립되고 가입했던 교사들 천 명 이상이 해직당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반발했고, 고등학생운동은 이 시기에 가장 대규모로 학교 현장과 지역에서 투쟁을 전개했다. 고등학생운동은 학생회를 직선제로 바꾸는 운동과 교육 개혁, 학교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한편, 민주화운동 등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 1990~91년 고등학생운동 활동가들 중 학교의 탄압 탓에 혹은 정권에 저항하며 자살한 열사들이 나타나는 등 그 치열함은 다른 사회운동 못지않았다.

하지만 고등학생운동은 1990년대 들어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 또는 좌파운동 등이 활력을 잃게 되자 그와 함께 위축되었다. 고등학생운동이 몇몇 단체들만을 남기고 사라진 것은,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고등학생단체를 처벌한 정부, 그리고 각종 징계를 남발하던 학교들의 직접적인 탄압이 1차적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탄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단 몇 년만에 사라진 것은 다른 운동의 몰락과 사회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손지희는 ‘90년대 들어 급격히 성장한 상업적 대중문화’, ‘형식적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정치적 권리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여겨진 것’, ‘90년대 동구권(소련)의 몰락 등에 따라 대학생운동의 주체와 조직 등이 침체된 것의 영향’ 등을 꼽고 있다. 그밖에도 90년대에 소비문화 및 대중문화의 확산에 따라 운동 문화의 재생산이 어려웠던 점, 1989년을 전후한 <전교조> 투쟁을 경험한 세대의 졸업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여기에서는 고등학생운동에서 발표된 「고교학생운동 시론」(이수진, 1988), 「「고등학생운동」의 역사적 출발과 그 진로」(정승민, 1989), 「민족해방운동의 일주체로서 고등학생운동 시론」(임재환, 1989) 등의 문서를 통해 고등학생운동이 자신들의 청소년운동을 어떻게 설명하고 말했는지를 살피려고 한다. 이 세 문건은 양돌규의 논문 「민주주의 이행기 고등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것을 참고했다.

‘충분히 성숙한’ 고등학생

먼저 고등학생운동은 운동의 주체, 청소년(또는 중고등학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고등학생운동 주체들이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 시선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현재의 청소년운동과 동일하다. 그들을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주장이나, ‘사춘기’, ‘과도기적 존재’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사회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된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이수진은 또한 TV나 대중매체에서 청소년들을 우범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도 비판하고 있다.

고등학생운동은 고등학생의 자주성, 주체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주체적 능력이 있다’라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청소년운동이 나이에 따라 성숙과 미성숙을 구분하고 억압을 가하는 사회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진 것과는 다른 점이다. 임재환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 대체로 16~19세 시기의 인간은 대략 조직적 사고가 완성되며 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자주적 성숙도도 더욱 촉진되어진다고 한다. 고등학생에게는 충분한 자각능력과 가치판단 능력이 있다. 단지 지금껏 이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교육적 환경이 이러한 능력을 억압하였던 것이다. 또한, 주위의 누구도 이러한 억압적인 환경을 지적해 주지 못하고, 환경의 타파를 위한 지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럽게 간직해 나갈 기회가 매우 적었던 것이다.

실제로, 멀리는 동학의병전쟁으로부터 일제하 독립운동, 공화국의 출범 이후 4·19의 주도적 역할수행, 60년대 반일투쟁, 70년대의 반독재투쟁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회운동 세력들이 장기적 침체기에 들어섰을 때에도 한 학교당 1,000여 명 이상씩 집단적인 가두투쟁을 벌이면서 남한 민족민주운동의 선봉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고, 학교와 신체 조건상 장기적으로 격렬한 가두투쟁이 어려운 여학교에서도 실제로 대학생보다 월등한 다수가 집단적으로 (한 학교당 4~600여 명 이상씩) 가두투쟁을 단행하여 고등학생의 위력을 마음껏 보여왔다. . . .

• • •

그러나 박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무자비한 탄압과 치밀한 반동화 공작으로 인해 고등학생운동은 그 역사성이 단절되고, 70년대 중반부터 80년 초까지 장기적 침체에 들어갔으며 지금은 그 역사성을 올바로 계승하지 못한 상태이다. 여러 가지 차이를 무시한 채 고등학생들의 본질적 자주성을 의심한다든지 대학생들과의 근본적 차이를 운운한다는 것은 고등학생들의 삶을 피동화시키는 것이다. 같은 또래의 노동청소년의 주체적 생활의 모습이나 이들이 보여주는 자주적 삶의 투쟁적 열기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고등학생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또한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나섬을 알 수 있다."

- 「민족해방운동의 일주체로서 고등학생운동 시론」
(임재환, 1989)

고등학생들의 성숙함을 역사 속의 고등학생들의 실천 사례들을 근거로 강변하면서, 이러한 능력이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운동이 단절되고 계승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눈여겨볼 만하다. 또한 이수진은 고등학생들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사대주의, 비민주적 권위주의, 자본주의를 주입하는) 제도교육과 가정의 봉건적 충효사상, 청소년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사회문화 등이 억압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수진은 이어서 “이제 고교생들이 어린아이라는 생각을 씻고 모두가 이들의 진출을 격려하고 지원할 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10대 중반 정도, 즉 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정신적 능력이 성숙했다는 주장은 그밖의 글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고등학생운동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책임질 미래의 주체라는 관념과 민주화운동/변혁운동/민족민주운동/계급운동(이하 변혁운동)의 새롭고도 순수한 주체라는 관념을 많은 부분 수용하고 있다. 대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미성숙하다는 주장 등은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도, 고등학생들이 기성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순결한 주체라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다. 이수진은 고등학생운동의 의의에 대해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간형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점이다. 이들은 아직

자본주의의 온갖 부패와 타락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진출은 우리 사회의 민주세력만이 아니라 전체 민중의 품성을 운동의 과정에서 정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임재환은 고등학생운동을 놓고 “애국의지에 순결하고 인간애에 순수한 고등학생들은 압제자의 썩어빠진 사상에 물들지 않고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당당히 떨쳐 일어선다고 묘사하고 있다. 미성숙하지는 않지만 순수한 존재, 어찌면 모순되게도 보이는 이러한 서술이 고등학생운동이 그러 보이는 청소년들의 모습이었다.

즉 고등학생운동은 고등학생들이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임을 강조하면서 “민족민주운동의 일주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등학생운동은 (중)고등학생을 ‘어린이’, ‘유아’로 취급하고 보호하고 억압하려는 사회에 맞서 고등학생들은 ‘어린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등학생들은 “젊음 · 열정 · 순수 · 의리 · 패기”(임재환) 등의 장점을 갖고 있고 충분히 주체적 역량을 갖고 있는데 이를 억압하고 보호하려고만 하는 사회와 변혁운동 주체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다.

변혁운동의 일부라는 의식과 독자적 운동이라는 의식

이 시기 고등학생운동은 자신의 운동을 변혁운동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래서 고등학생운동의 정당성은 중고등학생들의 주체성 외에도, 중고등학생들의 계급성이나 민족성, 순수성 등을 논거로 삼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계급의 자식이고 그러한 계급을 이어받을 것이므로 변혁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면서도, “계급이기주의를 떠나 민중운동에 헌신”(이수진)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또한 당시 운동의 특징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주통일’, ‘노동해방’, ‘민주주의(직선제, 군부독재 타파)’ 등의 거대담론으로 연결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다. 가령 사립학교에서 교사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는 사학재단에 맞서 투쟁하면서 “교육민주화 탄압하는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고, “(학생회) 직선제로 입시경쟁을 끝장내자”라고 피켓을 드는 모습 등에서 이런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정승민의 글을 보면 고등학생운동을 변혁운동 안에서 어떻게 의미 부여하려 했는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고교생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고교생들이 조직된다는 것은 민족민주운동에 어떠한 의의를 부여하는 것인가?

첫째, 민족민주운동에 독자적인 전투부대로 참여함으로써 민족민주운동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킨다.

현재의 고교생운동은 참교육실현을 투쟁의 방향으로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참교육의 실현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정치-사상적 작요의 쟁취를 투쟁 방향 속에 결합시킬 때 고교생운동은 민족민주운동의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 될 것이다.

둘째, 민족민주운동에서의 후비대 역할을 통해 민족민주운동의 역할을 강화한다.

▲ 고교생들은 대부분 민중의 아들딸들로 고교졸업후 사회 각 계층으로 이전하게 된다. 특히 실업계 고교생의 경우 거의 90%의 학생이 현장 또는 사무직에 취직하게 된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고교생 시기부터 노동운동가를 양성하여 이전시키는 것은 결코 꿈같은 일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18~19세의 어린 노동운동가들이 의젓하게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실제로 3학년의 경우 대학팀과 노동현장 이전팀으로 나뉘어 지도되고 있다고 한다.

▲ 군대를 민중운동 탄압이나 정권유지를 위한 가리개로 이용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반면에 군대를 민족민주운동의 주력부대, 동조세력으로 조직하는 일은 쉬워질 것이다. 군대에 가는 청년들의 평균 학력이 고졸임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범국민적인 우호적 태도가 형성될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 민족민주운동에의 입문 나이를 낮춘다. 대학에 가거나 사회적 경험을 쌓아야 비로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생 때부터 민족민주운동에 입문한다는 것은 대학생이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교생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해보라.

...(중략)...

더이상 보호대상임을 거부하며 민족민주운동의 '새별'로 떠오른 고교생들. 이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따뜻한 격려와 지원, 연대를 민족민주운동 진영에 기대하고 있다.아! 언제쯤일까? 노동자계급의 집회에 어린 동지들이 깃발을 휘날리며 당당히 입장할 그날은.

-「고등학생운동」의 역사적 출발과 그 진로」(정승민, 1989)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고등학생운동이 중고등학생들의 권리에 관한 운동이며, 교육제도 등에서 자기를 해방시키기 위한 운동이라는 것 역시 활동가들은 동의하고 있었다. 고등학생운동이 고등학생들의 입시제도로부터의 해방,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문제부터 시작해야 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조직화와 운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등장한다. 학내 문제 해결을 구심점으로 모이고 시작해야 하며 그 이후에 사회 변혁 투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당시 운동 안에는 ‘고등학생의 자기 이해관계를 위한 독자적 운동’이라는 인식과, ‘민족민주운동, 변혁운동의 일부’라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임재환은 고등학생운동을 교육운동의 일부로 위치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고등학생운동은 식민지 청년 학생으로서 부과되는 민족적 과업을 위해 투쟁하며 학교, 교육, 사회민주화투쟁에 있어 주인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회복해내는 것을 제 임무로 하는 운동이다.”


- 「민족해방운동의 일주체로서 고등학생운동 시론」
(임재환, 1989)

이 두 가지 관점은 별 다른 문제없이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으로 쟁점과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수진은, 고등학생운동이 민중운동에 헌신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현재의 과제를 논하면서 고등학생운동이 ‘다른 운동으로 향하는 길목’이나 ‘예비학습의 과정’으로만 여겨지거나, ‘고교생의 현실을 떠나 사회의제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고 ‘교육운동의 일부로 뭉뚱그려진 것’ 때문에 자기 발전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한다. 고등학생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독자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고등학생운동이 대중성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교 현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도 가지고 있었다. 세 글들을 보면, 이수진에 비해 다른 저자들은 다른 운동의 지도와 지원 등을 좀 더 강조하는 인상이다. 이들은 이수진과 달리 고등학생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대한 의식을 대중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은 ‘교사운동의 동반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계급운동의 일부’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이처럼 관점이 뒤섞여 있는 것이 이 시대 고등학생운동의 특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긴장관계는 단지 운동 내부에서의 방법론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다른 운동이나 다른 다른 주체들과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1989~91년 <전교조> 창립과 대량 해직에서 시작된 투쟁 국면에서도 나타난다. 교사들의 해직을 반대하며 각 학교 등에서 일어난 투쟁과, 부산·광주·마산창원 등에서 결성된 고등학생대표자협회의 활동은 ‘선생님 지키기’ 운동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요구와 목소리를 가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인가? 대중적 운동이 급격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강조점은 달라진다. 청소년 대중들이 대부분 선량한 교사의 해직에 분노하여 ‘선생님을 돌려달라’라고 외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 <부산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부고협〉) 의장이었던 황순주 같은 경우는 <부고협>은 <전교조> 투쟁 이전부터 준비된 고등학교 학생회의 연합체이고 “우리는 전교조 투쟁만을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었다. 교육 주체로 자주적으로 나선 것이었다. 전교조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일부분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고등학생운동과 청소년운동의 닮은 점

이때 고등학생운동은 그 성격이 현재의 청소년운동과는 많은 부분 다르다. 어떻게 보면 현재에도 이와 같은 ‘순수한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사회 참여’라는 형태의 청소년들의 정치적 실천은 곧잘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검토한 세 개 문건의 필자들이 말하듯, 3.1운동이나 4.19로부터 촛불집회나 세월호참사에 대한 행동까지 계속되는 현상이다. 비교적 선명한 이념과 투쟁론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은 80, 90년대의 특징이지만 말이다.

그런 한편, 고등학생운동에서도 독자적으로 청소년들의 권리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 문제 등을 운동의 주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운동 활동가들은 그 당시에도 다른 변혁운동의 활동주체들에게 자신들을 ‘어린이’로 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고 요청했었다. 그리고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만 보고, 미성숙하고 위험하다고 규정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었고, 학생인권 보장과 경쟁교육 타파의 문제를 주된 과제로 설정했다. 1980년대에 시작된 고등학생운동을 현재 청소년운동의 역사로 보는 까닭이다. 고등학생운동의 독자성과 연계성이라는 복합적 성격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특별히 분리되지 않고 ‘해방’을 위한 하나의 과제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른들과 다른' 청소년들 의 목소리

1990년대 후반의 청소년운동

PC통신과 인터넷, 그리고 청소년문화

1990년대 중후반, PC통신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은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교류하게 된다. 이동거리와 비용, 시간에 대한 제약이 적은 만큼, 청소년들은 PC통신의 토론방을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여러 불만이나 개인의 고민, 관심사 등을 나누는 데 주로 사용했다.

1995년, 최우주씨가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나우누리과 하이텔에서 학생인권운동에 의지를 가진 청소년들이 모여 <중고등학생복지회>를 만들었다. 청소년들에 의한 자생적인 운동 단체인 <중고등학생복지회>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그밖에도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 속에 1990년대 후반에는 <사이버유스>, <채널텐(Ch.10)> 등 온라인에 기반을 둔 여러 시도가 나타났다.

기성세대와 언론들은 청소년들이 이처럼 통신공간에 빠르게 적응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요즘 청소년들'의 문화로 보고 있었다. 1999년의 한 기사에서는 이런 현상을 "요즘 10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배운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 활발해진 대중문화와 온라인의 물결 속에서 기성세대와는 구분되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모습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오프라인에서는 <하차센터>나 공간 <민들레>와 같은 청소년을 위한 대안문화 공간이 생겨나고, 온라인 상에서는 웹진 형식의 플랫폼으로 토론하고 정보를 나누는 곳이 여러 군데 생겨났다. 이 중에는 청소년문화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 어른들이 지원을 하고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형식의 <사이버유스>와 같은 공간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들이 시작 단계부터 모여 만든 <네가진(Negazine)>, <아이두>와 같은 공간들도 있었다.

<사이버유스>는 청소년과 성인이 공존하는 공간이지만 어디까지나 동등한 입장에서,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운영을 모토로 거의 모든 콘텐츠 운영을 청소년이 진행했다. <네가진>의 편집장은 당시 <네가진>을 “입시지옥과 틀에 박힌 학교 교육에 찌든 친구들이 함께 숨쉬고 꿈꾸는 순수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했다. <네가진>은 창간문을 대신해서 '청소년해방선언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간들은 '청소년 문화 공간'이라는 키워드로 묶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청소년들이 사회에 발언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의도로 기획되었고, 다루는 내용들 또한 청소년 인권, 학생인권, 혹은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보는 시선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에서 출발했다. 공간들의 운영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독자성과 순수성, 어른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운영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기 청소년운동의 현장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청소년들을 모아낼 기술력이 있는 청소년 개발자·기획자들의 만남이 있었다. PC통신 기반의 청소년인권단체와 웹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함께 연대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청소년운동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의 정치적 의제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 두발자유화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 및 캠페인인 '노컷운동'이 일어났다. <아이두>, <사이버유스>, <채널텐>이 연합해서 만든 <웹연대 위드>가 기획한 노컷운동은 십만 명이 넘는 서명자를 모으면서 두발규제 문제를 사회적 문제이자 쟁점으로 공론화시키고 청소년운동의 존재와 목소리를 세상에 새겼다.

1990년대 후반, 오프라인상의 청소년운동은 큰 탄압과 자원 부족에 직면해야만 했다. 반면 온라인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돈과 거리의 제약 없이 쉽게 청소년인권 이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슈의 파급력도 컸다. 그래서 당시에 온라인 공간은 중요한 운동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런 경향은 2000년대에도 이어지게 된다.

청소년 당사자의 의제를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 청소년운동은 주로 학생인권이나 입시 문제를 이야기했다. 민주화운동 이후, 인권이나 기본권 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회에서 학생/청소년들은 여전히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다들 민주화나 문화 개방 등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청소년들이 겪는 삶의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청소년운동이 시작되었다.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각종 규제와 억압들을 ‘인권침해’라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도 이 당시부터였다.

1990년대 중후반. 언론에서는 교실붕괴, 학교 부적응 등의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나열하며 교육제도가 낳은 부작용들에 대해 말하는 시기였다. “학생들이 아프다, 보듬어줘야 한다.”는 논조 또한 강했다.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서도 통신공간에서 자퇴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하게 오고가기도 하고, 대학을 위해 삶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는 방식의 삶이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운동의 주체들은 학교의 안과 밖에 있었지만, 학생들이 주를 이뤘고, 중심의제 또한 제도권 교육 내의 문제들이었다.

하이텔과 나우누리에 자리 잡은 <중고등학생복지회>는 자생적인 단체이면서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나서서 청소년들의 인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적 자각을 단체였다 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다음은 하이텔/나우누리의 <중고등학생복지회>에서 1998년 학생의 날에 발표한 「중고등학생인권선언서」이다.

중고등학생인권선언서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학생의 인권 역시 보편적 인권 안에 존재하며, 학생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이 지닌 기본권을 정당히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이러한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삶의 현장인 사회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인권을 공공연히 침해당하고 있으며, 편견과 인습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암묵적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마저 당사자인 학생이 아닌 성년자가 중심이 됨으로써 일방적 보호, 훈육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나아가 이 나라의 왜곡된 정치구조와 맞물려 당국은 학생문제를 투표권자인 성년의 시선으로 일관하는 정책을 남발하여 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학생 또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지닌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그에 따른 마땅한 권리를 가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학생 스스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1. 학생은 나이, 성별, 학교 성적 등 어떠한 기준으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2. 학생은 과도기의 세대가 아닌, 인격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외부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가 있습니다.
3. 학생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4. 학생은 쾌적한 환경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닙니다.
5. 학생은 학교의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교육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를 지닙니다.
6. 학교에서 학생의 모든 자치 활동은 교사나 학부모 등 타인에 의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7.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매체를 접할 수 있고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닙니다.
8. 학생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9.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노동활동을 스스로 판단하여 할 수 있으며 학생이란 신분으로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10. 위와 같은 학생의 모든 권리를 부당한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11. 학생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킬 책임을 지닙니다.
12. 학교, 가정, 국가를 비롯한 사회는 위의 권리를 보장하며 합당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13.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법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천구백구십팔년 십일월 삼일
학생의날하이텔 중고등학생복지회, 나무누리 학생복지회


온라인을 통해 발표된 이 선언서는 어른들은 누릴 수 있지만 학생들은 누릴 수 없는 여러 권리들을 학생도 동등하게 누려야 함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한다. 바로 직전 시대의 고등학생운동과는 다소 다른 느낌을 준다. 이 당시의 선언에 담긴 내용은 현재에도 여전히 청소년에게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며, 여전히 다루고 있는 의제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도’받지 않는 ‘독립적’ 운동

이때 청소년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청소년운동의 독립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여러 온라인 청소년 공간들도 청소년들만의 사이트나 웹진을 표방하고, 어른들로부터 독립된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당시, 새로운 청소년 세대의 문화적 역량 등을 강조하던 사회적 분위기도 청소년들이 기존의 ‘어른들’과 무언가 다른 감성과 생각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데 한몫을 했다.

운동에서 이 같은 독립성을 뚜렷하게 선언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2000년,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창설을 위한 선언의 초안을 들 수 있다. 이 선언문에서는 이전 시대 고등학생운동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비판한다. 비판의 주된 이유는 고등학생운동이 “스스로 당당한 주체가 되려는 노력에 치중하기보다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참교육 운동이나 대학생운동권들의 사회 민주화 운동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것이다. 운동의 내용 면에서도 고등학생운동이 “정작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 문제와 학생, 미성년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지도 않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도 않았다.”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고등학생 운동은 말 그대로 전교조 선생님들과 대학생들에 의해 ‘지도’받고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자신들은 외부로부터 지도받지 않으면서 직접 행동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어른들로부터 지도받지 않는 운동,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바꾸는 운동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시대에 태동한 청소년운동의 중요한 첫 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청소년운동이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운동을 만들어가야 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이해받지 못했던 청소년운동의 열악한 입지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청소년운동 내적으로도 과거와 다른 새로운 운동을 만들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많은 청소년운동 단체들이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고,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운동에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대개의 단체들이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1, 2세대 정도가 지나면 사라지곤 했다. 청소년인권 문제 등을 이슈화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운동의 방법론이나 변화를 위한 계획이나 역량도 부족했다. 

'진보적' 이라고 내세운 청소년 운동

2000년대 초중반의 청소년운동

정치적으로 역동하는 시대 속에

2000년 노컷운동 이후 2004년 이전까지, 2000년대 초반에는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 <전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진보적청소년연합>, <청소년인권모임 고슴도치> 등의 다양한 청소년단체들이 만들어진다. 또한 고등학생운동에 그 뿌리를 둔 청소년단체들이 연합하여 꾸린 단체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도 2000년에 출범했다. 온라인에 기반을 두지 않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부산의 <청소년희망네트워크 작은숲>, 경남 진주의 <행동하는 청소년> 등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초반은 한국의 정치적 역동성이 컸던 시기이다. 2002년 미군장갑차 사망 사건으로 인한 촛불집회가 대중적으로 벌어졌고,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온라인과 시민들의 지지 속에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 이후 이라크파병이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등의 사건들로 촛불집회가 계속 전개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거리의 정치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늘어났다. 또한 2000년대에는 진보/좌파정당인 <사회당>과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고 2004년에는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또한 청소년운동의 차원에서는 2000년 노컷운동으로 그 존재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후, 여러 청소년인권 의제들이 등장함과 함께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졌다. 학생인권 문제들에 더해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권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청소년 참정권 등의 이슈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거나 사건을 통해 터져 나왔다. 정부에서도 민주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정치 참여 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청소년특별회의’ 등 여러 참여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청소년의회를 조직하는 등 청소년들의 ‘정치·사회 참여’ 혹은 ‘민주시민교육’ 등을 사업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온라인이나 정당, 정부기관을 통해 두각을 드러낸 청소년 개인들도 나타났다. 이러한 운동 내적 상황과 외부의 조건이 맞물리면서 이 시기의 청소년운동은 운동 외부의 다양한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등의 정치적 활동을 보였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운동이 다른 여러 사회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일종의 진영적 성격, 정파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활발해진 것을 ‘진보성’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당시 청소년운동의 주체들이 곧잘 자신들을 ‘진보적’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따온 것이다.

청소년운동은 ‘진보적’이라는 선언

사실 2000년 이전부터 청소년운동의 이러한 성격은 존재했다. <중고등학생복지회>나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역시 “진보적 청소년운동” 등 운동의 개념과 정치적 지향과 전망을 고민하고 있었다. 누니 등은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출범 시기에 발표한 글에서 청소년을 ‘사회라는 기계의 예비 부속품’으로 보는 사회구조가 청소년 억압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시적 관점을 가진 청소년운동을 제안했다. 또한 2000년 출범한 <전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전고협) 역시 과거 고등학생운동의 흐름을 계승하는 것을 표방하면서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운동, 학생인권 보장과 함께 청소년의 사회 참여 등에 주력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도 고등학생운동을 계승하여 진보적 관점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운동이 갖고 있던 ‘진보성’의 경향이, 2000년대에는 사회 상황의 변화로 더 대중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직접적 계기는 2002년

촛불집회였다. <민주중고등학생연합>이나 <전고협> 등은 촛불집회 현장에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 이후로 청소년운동은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이야기하고 ‘진보적 성격’임을 스스로 표방했다. <진보적 청소년 연합>(〈진청련〉)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청소년활동가들의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선언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당”인 진보정당(더 구체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하며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 선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을 보면 청소년운동 단체라고 할 만한 곳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있지만 청소년 네티즌 연합이나 정부의 참여 기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등 다종다양한 이들이 ‘청소년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청소년 활동가 공동 선언문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적 사건 4.19와 5.18 그리고 6월 항쟁에 늘 빠지지 않았던 그들은 바로 청소년이었습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에 대한 두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행사에서 우리는 청소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을 반대하고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그 자리에 우리들 청소년들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이후 광화문에는 탄핵을 무효하는 촛불을 든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기성세대는 말 합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공부나 해...” “너희는 미숙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미숙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미래의 주역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미래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이기 이전에 오늘 사회의 구성원이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가 미숙하고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건 옳고..이건 그르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곱지 않은 시선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사회의 구성원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소년 운동가, 학생회, 동호회, 동아리, 청소년활동을 하는 만 9세에서 만 24세의 대한민국 헌법으로 인정하는 청소년들이 비록 투표권은 없지만 이렇게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정당, 돈과 권력의 구애 받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행하는 정당, 청소년이 공부하는 기제가 아니라 기성세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는 정당. 청소년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각 분야에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정당,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당 그러한 진보정당을 지지합니다.

●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활동가 22인 선언 ●

- 홍박승진 (진보적 청소년 연합 [진.청.련] 대표)
- 이계덕 (서울특별시 청소년 회의 기획분과 정책특별의원)
- 박세연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정치위원회 의원)
- 김흥건 (청소년 단체 함께하는 우리 소속)
- 허지희 (여중생사건 범국민 대책위원회 청소년 대표)
- 고희종 (HJ 엔터테인먼트 대표)
- 조윤설 (대구지역 청소년 논객)
- 권오범 (청소년 단체 행동하는 청소년 회원)
- 한예진 (난장파티 [까] 기획팀)
- 박진석 (경기도 청소년 네티즌 연합 부회장)
- 이혜정 (민주노동당 시흥지구당 당우)
- 엄기남 (레슬링 가상리그 ANW C.E.O 가미넴대제)
- 박현익 (진보적 청소년 연합 [진.청.련] 회원)
- 강영미 (민주노동당 강서 을 지구당 당원)
- 김성열 (서울특별시 청소년 동아리 연합 동아리 회원)
- 김영식 (비학생청소년/10대 독립 아이두 일반회원)
- 김지은 (서울특별시 청소년 회의 홍보분과 정책특별의원)
- 신철훈 (품물패 한울소리 부장)
- 배민후 (前 과천시 청소년 위원회 위원)
- 손윤준호 (학벌없는 사회 전국학생모임 일꾼)
- 양정훈 (탄핵무효를 위한 범 청소년 모임 웹 사이트 책임자)
- 김서영 (서울특별시 청소년 회의 기획분과 정책특별의원)

< 청소년분야 12대 정책 과제 >

1. 청소년의 선거권 ·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2. 지역별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의회 구성 · 운영
3. 국가인권위원회내 청소년인권전담 소위원회 설치
4. 정부의 청소년행정기구 일원화 조속 실현
5.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 지원
6. 지역기반 구축을 통한 청소년활동 지원
7. 학교의 대학입시학원화 중단과 공교육 정상화
8. 학교내에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 배치
9. 청소년 국제교류와 국제이해교육 증진
10. ‘청소년의 달’ 조정과 청소년문화 육성
11. 청년실업 해소와 청소년 경제활동 참여 촉진
12. 청소년보호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강화

기타. 대통령 청소년 특별 회의, 청소년 국회, 교육부 산하 학생 자문 위원회, 각 정당 청소년 자문기구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정치 및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오늘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인정받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특정정당지지 없이 청소년 분야 12대 정책과제 함께 전달합니다.

아래 분들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청소년 분야 12대 정책과제 전달의사를 표현하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의원 99인

김윤후, 김지연, 김현문, 김혜원, 김희영, 남명지, 박민기, 박세연, 방지은, 손준태, 송현정, 신선미, 신채은, 이동수, 이시은, 이이삭, 이지영, 장정윤, 정승원, 정재우, 최은영, 현종화, 김시원, 김태우, 박상우, 송상현, 이길, 이혜진, 정유진, 정주영, 최희정, 권태형, 신빛나라, 임현철, 조선영, 현호섭, 황현석, 김동초아, 김민정, 김진경, 성연경, 오소진, 류지수, 유지현, 장성은, 윤이나, 전외수, 송화진, 도라지, 진정은, 정현지, 이정현, 이나영, 정법근, 김재우, 박현지, 김관태, 최민영, 임태훈, 서현룡, 주이랑, 임세은, 차진태, 류호, 김진경, 박세희, 유다현, 양근영, 김진희, 송정근, 김성진, 박현기, 최지민, 조성규, 박은숙, 유지호, 장소영, 정유경, 조기정, 정시경, 최수명, 신호연, 이종우, 류정희, 정승아, 이연주, 이한나, 유진주, 김선하, 안승은, 표광희, 윤영현, 김은영, 서병국, 이준형, 김선용, 신길호, 고현주, 박모란
박호연 (대전지역 청소년 논객 mailzzang)

서울특별시 청소년 회의 의원 23인

고희종, 이현정, 문지혜, 이귀진, 김근우, 이슬기, 한승아, 김서영, 이학재, 이계덕, 지강일, 최윤정, 김해진, 임보현, 김준미, 권민지, 김지은, 이가영, 황미나, 정현철, 한지선, 강재은, 하정민

<진청련>의 존재와 활동은 이후 민주노동당 당내에 청소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데,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이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정치 참여를 주장하고, 청소년운동의 정파성 — ‘진보성’을 인정하고 표방하던 인식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자리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청소년동아리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식을 취하고 있던 <작은숲>에서 2003년 NEIS 반대 운동을 한 이후 <작은숲>의

박정훈은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했다. 청소년운동의 많은 부분에서, 청소년 억압이 정치성을 띤 문제이며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통해 근본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공유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과거 청소년 운동은, 독재정권이라는 뚜렷한 적을 앞에 두고 싸웠다. 확실한 목표가 있었고, 신념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뚜렷한 적보다는 보이지 않는 모순들이 더욱 많다. 학교밖의 사회에서는 어느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경제성장으로 어느 정도의 평화로운 모습이다. 그러나 정작 학교안의 모습은, 과거 일제시대와, 군사독재의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학교장의 수직적 운영구조, 집회, 결사의 자유와 선거권 부재등과 같은 정치적 억압등.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청소년 운동의 모습은 보면, 그러한 근본적 모순들은 외면하였다. 또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산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그 힘을 찾기 힘들었다. ……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운동자체를 막는 것들에 대한 저항과, 우리들의 근본적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산발적 운동으로는 불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인 학교 민주화를 위한, 청소년들의 권리를 위한, 정치적 투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3.07.18. 박정훈)

반복되는 문제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의 청소년운동도 많은 부침을 겪었다. 1990년대부터 여러 청소년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졌다가 2~3년만에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이 시대를 지나 현재까지 장시간 존속한 청소년운동 단체는 한 손으로 꼽을 만하고, 2004~5년 시점에는 많은 청소년운동 단체들이 사라지거나 침체되었다. 또한 정부 기관 참여 등의 실천도 청소년운동과 딱히 구분되지 않았고 ‘청소년활동가’라는 명칭은 광범위하고 혼란스럽게 쓰였다. 언론 등에 노출되는 일부 ‘스타 청소년 활동가’들은 참 많았다지만, 실질적인 운동의 동력

이나 조직력은 그리 강하지도 못했고 지속적이지도 못했다. 새롭게 시도된 조직들이나 운동들은 사람과 자원의 부족 속에 좌절하거나 실패하기 일쑤였다. 이는 운동의 양상과 사회적 조건은 분명 변화했다. 그러나 청소년운동의 부침은 90년대의 청소년운동과 별로 다를 것 없이 반복되었다.

청소년운동의 정치 참여나 다른 전 사회적 의제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는 움직임은, 청소년운동의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청소년운동이 제기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세력화를 피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실천과 방법을 고민해야 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청소년운동의 요구는 ‘진보성’으로 나타났고, ‘진보적 청소년운동’임을 내세우는 단체와 개인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대중집회 참여나 정당, 정부기구에 참여하는 활동이 많아지면서 청소년운동의 독자적인 논리와 담론, 활동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을 뜻하기도 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이 되면 도돌이표로 반복되고 다른 운동과의 경계선이 흐릿한 청소년운동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청소년운동을 재조직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록

2006년 ~ 2013년 청소년운동 역사

* 어느 정도 수도권 중심적인 역사 서술인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길 바란다.

● 2006년

2005년까지 청소년운동의 반복되는 실패와 가능성의 발견은 2006년, 새로운 조직적인 움직임을 낳았다. 바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발족한 것, 그리고 <청소년인권 활동가네트워크>가 결성된 것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2004년 만들어졌던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가 전환하여 2006년 2월에 시작되었다. 초기 <아수나로>의 구성원은 <전국중고등학생 연합>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진주 <행동하는 청소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등이었고, 이들은 20대가 된 후에도 청소년운동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연구하고자 <아수나로>를 꾸렸다.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는 청소년이 당사자로 조직한 단체를 만들도록 촉진시키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다가, 2006년에 ‘행동’으로 이름을 바꾸고 스스로 행동하고 조직하는 단체로 성격을 바꾸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처음에는 서울지부와 진주지부(행동하는 청소년 사람들이 참여)로 시작해서, 이후에 광주지부와 울산지부 외 여러 지부들을 만들어갔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진영 형성’을 표방하고 만들어진 연대체였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내건 기치는, 말하자면 계속해서 짝 트고 말라 죽기를 반복해온 청소년운동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곧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체, 조직, 범주를 만들어내겠다는 선언이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제안으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다함께>,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가 모였고 거기에 개인 활동가들이 일부 함께하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운동의 역사 연구와 정리에 초석을 놓았고, ‘청소년활동가’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다수 만들어냈으며, 이후 청소년인권운동의 실체를 그리고 청소년운동의 언어와 주장을 만들어낸 산실이 되었다.

2006년 발족한 두 조직이 이전까지의 청소년운동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비청소년과 청소년의 연합체를 명시적으로 표방했거나 비청소년들의 청소년운동 참여를 전면화했다는 것이었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 ‘만’ 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념을 부정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지만 비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2~3년마다 새로운 주체를 계속 만들어내야 했던 청소년운동의 난점을 돌파하고자 한 결정이었고, 지속적이고 발전하는 청소년운동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섬을 의미했다. 물론 이전까지의 청소년운동에도 비청소년 주체들이 있었고 작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비청소년들의 참여와 역할을 조직의 성격과 운동 방식에서부터 명시한 것은 2006년 무렵의 큰 변화였다.(<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과 같은 조직을 예외로 하면.) 다른 한편으로 이는 비청소년들이 함께하더라도 청소년 주체의 주체성과 당사자성을 해치지 않기 위한 원칙과 노력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두 조직의 등장 속에서 2006년 청소년운동을 관통하는 주제는 2000년, 2005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두발자유였다. 청소년운동 단체들은 5월 14일, 2005년 5월 14일 두발자유 집회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두발자유, 바로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열고 2005년 두발자유 운동의 불씨를 조금이라도 이어가려고 애썼다. 이날 집회에서는 두발자유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학생인권의 대표적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5월 20일에는 학내종교자유 집회가 열렸다.



학교 안에서의 운동도 여러 곳에서 일어났다. 서울 양동중학교에서는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내시위가 있었고 서울 동성중학교 오병현 씨는 두발자유, 체벌금지, 강제보충자율학습 중단 등을 요구하며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경기도 수원 청명고등학교에서도 두발규정 개악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도했고, 경기도 파주 금릉중 학생들은 두발단속과 체벌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밖에도 여러 학교들에서 학생들은 서명운동과 설문조사를 통해 두발자유를 비롯한 학생인권을 요구하고 행동에 나섰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운동이 주로 수도권에서만 벌어지는 현실을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청소년운동의 존재를 알리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여름 중에 전국행진을 기획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인천, 대전, 전주, 울산, 대구를 돌며 각 지역의 교육운동 단체와 청소년운동 주체들을 만났다. 가는 곳마다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1인시위를 하면서 학생인권의 목소리를 알리기도 했다.

또 한 가지, 2006년에는 ‘학생인권법안’ 등, 학생인권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등장했다. 2005년 두발자유 운동 이후 <민주노동당> 안에서 논의하여 만들고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학생인권법안’은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차별금지, 강제보충자율학습 금지, 종교의 자유, 학생회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여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생인권법안은 지금까지 제기된 학생인권의 대표적 사안

들을 제도의 형태로 묶고 하나의 현실적 요구안으로 가시화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다.

● 2007년

2007년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단체들의 지속적 활동과 학생인권법안 통과 요구를 통해 학생인권의 대표적 주장들이 공론화되었다. 2007년 열린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집회는 “▲ 두발용의복장 전면 자유화 ▲ 휴대폰 등 소지품 검사, 압수 폐지 ▲ 체벌, 욕설, 폭력 당장 그만 ▲ 입시살인, 입시신분제 즐 ▲ 학교에도 민주주의를”이라는 다섯 가지 요구안으로 이를 정리한 것이었다. 이는 학생인권법안이라는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더불어 입시경쟁교육의 문제를 함께 지적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무렵에 처음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거나 규제, 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생인권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는 휴대전화 규제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논리를 가다듬기도 했다.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서명을 모으고 홍보를 하는 등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학교 안에서의 투쟁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서울 중앙고 학생들은 두발자유를 요구하며 학내시위를 했고, 울산 신정중과 옥동중 학생들도 두발자유, 체벌반대, 등교시간 늦추기 요구 등을 하며 운동장 시위를 같은 날 벌였다. 울산 신정중·옥동중 학내시위는 이후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한 탄압 문제를 놓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만든 사례가 되었다. 체벌로 학생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 지역의 단체들과 공동 대응을 하기도 했다. 사학비리 문제나, 일방적 학교 이전 결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행동도 있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청소년운동 단체들이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었기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응이나 연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과 협력하여 학교 안의 문제를 조사하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회적 고발을 하는 활동 방식도 취했다.



2007년에 학생인권 운동이 더 전면화되는 것과 동시에 교육운동과의 연대 역시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2007년 하반기에 만들어진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는 <문화연대>와 <전교조>, <학벌 없는 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등의 활동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연대체였다. <운동본부>에 청소년운동 단체들과 활동가들도 참여하고 나름대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라는 공동의 목표 속에 연대 활동이 이루어졌다. 2007년 수능시험일에는 <청소년 다함께>에서 활동하던 청소년활동가가 수능거부 선언을 하고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6년부터도 <아이들살리기 운동본부>라는 연대체에 청소년활동가들이 참여했으나 그 과정에서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나 실천의 미비함 때문에 많은 불신이 쌓여 가던 상태였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본부의 경험은 교육운동과 청소년운동 사이에 좀 더 적극적인 교류와 만남, 서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다. 교육운동 외에도,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는 청소년활동가들의 선언을 발표한다든지 하는, 여러 사회운동과의 연대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 2008년

2008년의 청소년운동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언급해야 할 것이다. 이 해에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으며,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계기로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열리게 되었다. 촛불집회는 소위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전개되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태나 대운하 공약에 대한 저항, 언론에 대한 불만, 반미/반일 등과도 연관되는 애국심 분출 등 다양한 목소리가 혼합되어 있었다. 일단 한번 시민들의 ‘광장’이 열리자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들이 모였고, 비록 큰 주목을 받진 못했더라도 많은 소수자운동들도 이를 활용하려고 했다. 청소년운동도 마찬가지였다.

2008년 촛불집회를 처음 시작한 미조직 대중 중 상당한 비율이 청소년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청소년들의 촛불집회 참여는 활발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들이 국가에 의해서나 시민들에 의해서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일도 흔했고,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정치적 주제로 인정받지 못하곤 했다. 그래서 청소년운동은 2008년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문제, 청소년보호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 등을 키워갔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경쟁 중심 교육정책에 반대하고 광우병 위험 문제 역시 청소년들의 건강권이나 급식에 대한 권리 문제로 접근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2008년에 서울시교육감 선거(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되면서 서로 다른 지역별 교육감 임기 문제를 맞추기 위해 지역별로 재보궐처럼 잔여 임기를 채우는 직선제 선거가 시행되었다.)가 치러질 때, 청소년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으로 표출되었다.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은 2001~2005년 전개된 ‘18세 선거권 운동’ 이후, 선거권 요구 외의 다른 형태로 기획된 거의 최초의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었으며 청소년운동의 의제가 확장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2008년에는 청소년 참정권 외에도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며 신림동 순대촌에서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동을 했고 청소년활동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학생인권 운동도 끊이지 않아서 경남 마산 용마고등학교에서 두발자유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학내시위 시도가 있었다.

2008년 촛불집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운동에 입문했다. 일부에서는 <전국청소년학생연합>(전청련), <10대연합> 등 촛불집회에 참가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이 모여서 새로운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기존의 청소년운동 단체들을 알게 되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청소년들도 늘어났다. 청소년들은 2008년에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존재로 주목과 기대를 받았고 청소년들 다수도 역시 거리집회와 인터넷을 통해서 의식화되었다. 청소년운동을 하고 있었으나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더욱 더 정치적으로 의식화되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사례들을 포함한다면, 2008년은 청소년운동이 양적으로 성장한 호기 중 하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수나로>가 수적으로 많아지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단체들의 연대체라는 조직 성격을 변경하는 문제나 역할의 변경을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아수나로>와 <전청련>은 함께 기호0번 청소년후보 운동을 하는 등 연대해서 활동을 했다.

2008년 초, 학생인권법안 제정은 국회에서 좌절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의 단체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면서 <한나라당>이 통과를 가로막았던 것이다. 결국 구체적인 두발자유나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의 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고, “헌법과 국제조약의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한 줄만 추가시킬 수 있었다. 학생인권 문제 이후 운동이 주력하는 이슈는 일제고사 반대 투쟁으로 옮겨갔다. 이명박 정부가 초중고등학교에 전국 동시에 치르게 하려는 일제고사는 학교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고 학습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많은 우려를 받고 있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여러 교육단체들이 일제고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2008년 하반기에 일제고사 시험에 대해 선택권과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전교조> 조합원들이 해고당하는 일이 벌어져서 한층 더 큰 이슈가 되었다. 청소년운동에선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Say-No>(당시 금연광고의 패러디로, 일제고사는 해롭다는 이미지를 빌려옴.)가 꾸러지고 <아수나로> 등이 참여하면서 일제고사 반대 운동에 함께했다. 일제고사 반대 운동은 청소년운동이 현재 쟁점이 되는 주요 교육정책 시행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운동을 한 사례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교육운동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역시 일제고사 반대 운동을 통해 더욱 긴밀해졌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도 2008년까지는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했고 수능거부 선언도 계속되었다.

● 2009년

2009년은 일제고사 반대 운동이 활발하게 이어졌고, 이는 2009년에 시험 대비 보충 수업이나 성적 조작 등 일제고사로 인한 각종 피해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해직 교사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운동도 일제고사 반대 운동에 많은 힘을 들였다. 특히 2009년 초 서울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청소년활동가들이 노숙 농성을 개시하고, ‘오답 선언’ 서명을 받는 등 몸을 아끼지 않았다. 1년에 3차례 있는 일제고사 때마다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거리 집회, 홍보 활동, 토론회 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일제고사 반대 운동의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균열이 생기기도 했다. 가령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운동의 주된 방법은 시험 당일엔 ‘체험학습’을 가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교사 혹은 적어도 학부모의 동의와 지지를 필요로 했다. 청소년 당사자가 아닌 학부모의 의사에 따르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시험에 반대하며 하는 것이 결국은 또 하나의 프로그램화된 ‘학습’이라는 것 역시 청소년활동가들은 불편해했다. 청소년운동은 체험학습이 아닌 형태의 청소년 당사자들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으나, 조직력의 부족으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또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주류의 시선은 ‘어떻게 초등학생들까지!’ 하는 식으로 초등학생들에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사실 수능시험이나 모의고사라는 형태로 전국 일제고사가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제고사 시험으로 인한 체감 변화는 크지 않았다. 반면에 현실적으로 청소년운동의 주된 주체들은 중고등학생이거나 그 연령대였다. 청소년운동은 일제고사 반대 운동을 계기로 시험과 평가, 학업성취도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갔고, 수능시험이나 중간기말고사 등 기존 시험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만 문제라고 말하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교육운동에서도 교육학적인 ‘평가’ 자체에 대해 토론회를 여는 등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반대 운동의 주된 언어는 “우리 아이들”(초등학생으로 표상되는)이었고 일제고사는 “나쁜 시험”이라는 식이었다. (결과적으로 몇 년 후에 초등학생 일제고사는 폐지가 되었으니 그런 언어는 딱 그만큼의 승리를 거둔 셈이다.)

asunaro.or.kr

**NO TEST,
NO LOSER!**

: 줄세우기경쟁이 없다면 패배자도 없다!

일제고사, 경쟁교육반대 청소년행동
2010.07.09.금 / PM06:30 / 서울청계광장



2009년의 일제고사 반대 운동은 청소년운동에 내적 발전을 가져왔지만 기성 교육운동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으며 청소년활동가들에게 많은 피로감도 남겼다. 또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본부>가 2009년에 사실상 정지하고 수능시험철에만 반짝 활동을 하는 형태가 되면서 이 <운동본부>에 기대를 걸고 있던 청소년활동가들은 상당한 실망을 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본부>가 와해되는데 이에 책임을 지지 않고 추가로 다른 교육운동 연대체를 제안하고 꾸리는 모습에.)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본부> 역시 대선과 총선을 앞둔 선거용 일회성 기획이었던 것인가 하는 회의와 <전교조> 집행부의 변화에 따라 교육운동이 흔들려야 하는 현실에 대한 회의감도 더해졌다.

2009년 하반기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2008년, 경기도 지역에서 최초로 '민주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김상곤이 당선되었다. 김상곤의 공약 중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2009년 하반기에 김상곤은 학생인권조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교육센터 들>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오랫동안 청소년인권운동을 해온 배경내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갔고 다른 청소년활동가들도 연구팀이나 학생참여기획단 운영 등에 참여했다. 청소년운동이 그동안 축적해온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논리, 인권의 언어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학생들의 참여 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교육청을 대신해서 청소년활동가들이 사실상 실무를 처리한 분야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도의 형태로 그간 해

은 학생인권 운동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주었다.

2008~9년 동안 청소년인권운동의 문제의식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도 내부적으로 꾸준히 이어졌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여성주의와 청소년인권의 만남, 청소년 보호주의에 대한 연구, 청소년 노동에 관한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인권운동의 다른 영역을 개척하려 애썼다. 이러한 논의들이 모여서 <아수나로>의 활동가들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인권은 넘보다 ㅋㅋ』를 기획, 출간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수나로>가 기획하여 처음으로 전국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형태의 이 조사는 청소년운동이 직접 자신의 관점에 따라 주요한 학생인권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한 사례였고, 대표적인 학생인권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한 활동이었다.

● 2010년

2010년은 대외적으로 청소년운동이 가장 인지도를 높였던 시기이다. 여기에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소위 ‘민주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6개 지역에서 당선된 조건과,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 <아수나로> 등 청소년운동을 들고 나온 보수언론들의 속셈이 작용했다. 동아일보가 1면을 할애해서 청소년단체들이 일제고사 반대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의 조종을 받아서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보도했고, 조선일보도 2면을 내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에 대해 기사를 썼다. 다른 언론들도 사설과 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적 운동을 우려한다는 식의 내용을 쏟아냈다. 조선일보 등은, 하반기에도 <아수나로>에서 ‘학생에 대한 연애 탄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사를 내보내주었다. 비록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였지만 이 때문에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운동 단체들의 대중적 인지도가 반짝 상승하여 새롭게 가입하는 사람도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고 어느 정도 양적인 확대에도 기여했다. 물론 꾸준히 쌓아온 청소년운동의 활동과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는 하겠지만 말이다. 청소년활동가들은 청소년운동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각종 언론 보도들에 대해 반론을 써서 게시하는 등의 대응을 펼쳤다.

언론들의 집중 타겟이 되었던 2010년 7월 일제고사 반대 집회 등은 당연하게도 이전

과 비슷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2010년은 소위 ‘민주진보교육감’들이 일제고사 폐지에 관한 애매모호한 태도와 교육운동의 유보, 그리고 청소년단체들의 누적된 피로도와 학생인권조례 정국이 시작된 것 등 때문에, 사실상 청소년운동의 전면적인 일제고사 반대 운동이 마무리된 해였다.

2010년 6월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운동이 한 활동 중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주장한 기호0번 청소년후보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지역에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에 참가한 것이다. 2008년에 처음 서울에서 했던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은 2010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전국 지부들이 공동으로 기획하면서 전국적 활동으로 벌어졌다. 또한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위>에서는 예비 후보들에게 학생인권 정책을 요구하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선거인단에 청소년들도 포함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두발자유 문제나 집회의 자유 등에서 실질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안으로 상정이 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로 주목을 받았고, 학생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효한 장치이기도 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에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이들의 반대에 부딪혀 2010년 상반기에는 도의회에 제대로 상정도 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는 앞서 말했듯 보수 언론들이 학생인권조례 상 집회의 자유 조항 등을 ‘<전교조>에 의한 학생 정치화 기획’이라고 폄하, 왜곡한 것도 작용했다. 경기도 지역의 청소년활동가들은 학생들의 통과 서명을 모으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 입장을 발표하는 등 조례 통과 여론을 만들어 갔다. 학생인권조례는 상반기에는 결국 통과되지 못했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고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이후 여름에 도의회를 통과하여 10월부터 공포, 시행되었다. 수원 등 경기도 지역 청소년활동가들은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조례의 홍보나 정착을 위해 고심했다.

이와 동시에 2010년 하반기,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준비되고 있었다. 서울에서 심각한 체벌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광노현 교육감이 하반기부터 체벌금지 지침을 확정하여 발표하면서 학생인권에 관한 여론은 요동치고 있었다. 청소년운동은 학교 체벌금지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교사를 비롯한 사람들의 반감과 싸워나가는 중이었다. 주민발의는 그러한 배경 위에서 학생인권 논의와 현실의 실질적 전진을 위

해 제안된 방식이었다. 경기도와 같이 교육청 주도로 제정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내용적 한계나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래에서부터, 서울시 유권자 1%의 서명을 모아서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이다. 교사단체, 학부모단체, 그밖에 교육·노동·시민단체 등과 청소년운동이 함께 운동본부를 꾸리고 9~10월부터 실태조사 및 공청회, 10월 말부터 주민발의에 들어갔다.

● 2011년

2010년에 이어서 2011년에도 서울에서는 계속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이 이어졌고 이는 수도권 청소년운동의 뜨거운 감자이자 ‘블랙홀’이 되었다. 처음에 청소년활동가들은 주민발의라는 방식 자체가 청소년 당사자들이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웠기에 적극적으로 서명을 모으는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었다.(선거권을 가진 만19세 이상의 서울시민만 서명이 유효하다.) 그러나 법에 정해진 주민발의 서명 기한인 6개월 중 절반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호언장담했던 교육운동 단체 등의 조직 서명은 매우 저조한 것이 확인되었다. 필요한 8만 1855명에 한참 못 미치는, 아니 채 1만여 명도 되지 않는 수가 모였던 것이다. “서울시민 1%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학생인권조례”라는 오명을 피하고, 학생인권운동이 큰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결단이 요구되었다.

2011년 2월부터 <아수나로> 서울지부를 비롯하여 수도권 지역의 청소년활동가들 다수는 주민발의 운동에 전력투구하여, 거리 서명과 이슈파이팅, 온라인 홍보 작업 등을 맡아서 해나갔다. 노동운동과 교육운동 일부도 청소년활동가들의 호소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대의, 주민발의 실패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발의에 나섰다. 학교내 종교자유를 지지하는 <불교청년회>도 협력해주었다. 막바지에는 언론들의 학생인권 특집기사와 간지 홍보 등에 힘입어 시민들의 우편 서명 참여가 예상을 넘어서 들어왔다. 그 결과 주민발의는 기한 안에 8만 5천 장의 서명을 모아냈다.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말 걸고 발로 뗀 활동가들의 성과였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검토 결과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8만 1855명에 이르지 못해 재보정을 거치게 되었지만, 7월의 보정 기간에도 역시 필요한 수를 넘는 서명을 모아내, 약 10만 명에 이르는 서명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서울 주민발의의 성공 과정

은 청소년활동가들에게 기성세대 교육운동에 대한 불신, 학생인권이 그만큼 지지를 받는 의미 있는 이슈가 되었다는 자신감, 마지막으로 활동가들의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 감 등을 남겼다.



서울의 주민발의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들이 가시화되었다. 광주에서는 서울보다 앞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었고, 2011년 하반기에 제정되었다. 전북 교육청도 6월 말,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를 했다. 경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준비하여 2011년 5월, 주민발의 운동을 개시했다. 충북도 교육시민단체들이 운동본부를 꾸리고 주민발의를 할 것을 예고했다. 인천, 울산, 충남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정국은 하반기에 더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서울시의회는 주민발의로 상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빠르게 처리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역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던 서울시교육청은 공청회를 열었다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극우적 인사들에 의해 방해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광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수감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추진의 동력을 잃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강력하게 반대한 이들 중에는 ‘전교조’, ‘빨갱이’ 등을 습관처럼 얘기하는 극우적인 시민단체들만이 아니라 보수근본주의 개신교 세력이 끼어 있었다. 이들은 조례 중에 있는 차별금지 조항 중에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 윤리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실 그들 중 다수는 극히 보수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학생들이 교사들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학생들이 두발복장단속이나 체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이들에게는 ‘인권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조례 통과를 막으려고 하는 이들과 조례 통과를 요구하는 이들 사이의 갈등이 빚어졌다. 의회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연일 의견 표명을 했고 온라인을 통해 의견서도 계속 제출했으며, 1인시위 등도 이루어졌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눈치를 보며 사안을 겨울까지 끌었다.



주민발의 서명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했던 성소수자 단체들이었지만, 성적 지향 차별금지 등이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되자 적극적으로 조례의 원안 통과를 위해 참여했다. 12월, 성소수자 단체들은 서울시의회를 점거하고 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을 원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모여서 팀을 꾸리고 좀 더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여러 부분에서 후퇴하고 훼손당해야 했지만, 차별금지 조항은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결과적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운동은, 이전에 차별금지법 이슈에 이어서, ‘차별금지’ 조항,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이후에도 학생인권이나 관련 내용의 첨예한 쟁점으로 만든 사회적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성소수자 이슈도 더 활발하게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교육감 대행이 통과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가 박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도중에 복직하여 재의를 취소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국 2012년 1월에 선포되었다. 또한 경남에서도 주민발의가 12월에 최종 성사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정국이 휩쓸고 간 2011년이었지만 그것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2011년에는 대표적으로 ‘투명가방끈 운동’, 대학/입시거부선언 운동이 생겨났다. 이 운동은 과거 수능거부선언을 한 청소년활동가들의 맥을 잇는 것이면서, 2010년 고려대 김예슬 씨의 ‘대학거부선언’ 등의 문제의식에도 영향을 받았다. 대학/입시거부선언 운동은 청소년 활동가들 중 19세/고3을 맞이한 활동가들이 제안해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여기에 다른 입시거부선언을 할 사람들이 참여하고, 20대이면서 과거 수능거부를 했거나 대학비진학이나 대학자퇴를 선택한 이들이 참여하면서 운동이 커졌다. <투명가방끈>은 수능 당일 입시거부자 18명, 11월 초에는 대학거부자 30여 명이 모여서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또한 여러 캠페인과 집회 등으로, 교육과 대학과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투명가방끈> 운동은 과거 안티수능페스티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 등을 청소년운동이 계승한 한 가지 형태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010년이 언론 등에 의해서 주목을 받았다면, 2011년은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와 대학/입시거부선언 등 청소년운동이 힘을 쏟은 운동으로 인해 주목을 받은 해였다. 특히 수도권권의 청소년활동가들은 본의 아니게 전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홍보하고 목소리가 되었다. 2011년은 청소년운동이 대중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결과물을 낳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시기이다. 2009년~11년 동안은 청소년운동은 그

동안 쌓아온 학생인권에 대한 담론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현실화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명확히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운동에서도 어느 정도 존재감을 확인했다. 이는 2012년까지도 이어진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에 청소년활동가들이 다양한 이유로 무리를 하면서 소진이 되어, 다른 여러 가지 운동이나 조직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이후에 나타나기도 했다.

● 2012년

2011년에 이어서, 경남, 충북 등의 지역에서 주민발의를 비롯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들이 계속되었다. 청소년운동 주체가 없는 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이나 교육단체들이 나서서 학생인권조례를 요구하고 건의할 만큼 학생인권 보장이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선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국적 움직임을 모으기 위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여러 단체들이 모여 결성되었고 정보 교류와 연대가 이루어졌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학생인권의 가치를 담은 10개의 표어를 '10가지 약속'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으로 보급했다.

하지만 그만큼 학생인권 증진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경기도, 광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말만 나오던 학생인권 보장이 가시적인 제도화 현실로 나타나자 이에 대한 위기감도 높아졌다. 특히 이를 '진보교육감표 정책', '전교조표 정책'으로 인식한 보수/수구 층의 반감이 나타났고,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반발하고 보수적 성윤리/청소년관 등을 견지하는 일부 개신교계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교총>과 같은 교사 집단의 반대는 말할 것도 없었다. 이에 따라 경남과 충북에서는 주민발의를 성공시켰는데도 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발의하지 않거나, 도의회가 이를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고 부결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2012년은 청소년운동에서 '정치적 권리', 참정권 운동을 기획적으로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이 해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었고, <아수나로> 등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문제를 이슈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발의 서명에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없고, 집회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같은 내용들이 첨

예한 쟁점이 된 것 역시 참정권 운동을 준비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2012년 상반기 여러 청소년운동 단체들은 연대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위한 원탁회의>를 만들어 참정권 운동을 했고, 하반기에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내나라 운동본부>를 꾸려서 활동했다.

이 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만18세 선거권 운동과 달리 선거권 하나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가입 문제나 주민발의/소환의 문제, 선거운동, 학교 안의 표현의 자유 등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그만큼 참정권을 청소년의 보편적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논의가 발전한 것을 시사한다. <아수나로> 등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정당들에 청소년의 참정권 전반의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공식 질의하고,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와 캠페인을 열었다. 또한 <아수나로> 인천지부 등에서는 학교 안에서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학교 규칙들을 조사해서 알리는 활동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운동 주체들 사이에서 참정권 운동의 방식이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청소년활동가들의 피로감이 높았고 준비와 역량이 부족했던 것 때문에, 참여한 청소년활동가들의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대외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주류 언론을 비롯해서 대중은 이 문제를 ‘선거권 연령의 인하’의 문제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참정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성과를 낳긴 했으나 이것이 과거의 운동에 비해서 더 얼마나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겼는지는 좀 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역으로 2012년,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민주진보진영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소년들의 경선 참여를 막고 18세 기준으로 경선 선거인단을 정하거나, <통합진보당>에서 청소년 당원들을 제명시키는 등의 갈등도 일어났으며,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해서 운동사회 내부에서도 충분히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12년, 운동 내적으로는 2006년부터 활동해온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조직을 정리하면서,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활기>는 이전부터 <네트워크> 안에서 청소년운동의 재정적 인적 이론적 ‘활동기반’을 만드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 해오던 활동이었다. 2012년 3월을 기점으로 조직 자체를 이러한 성격으로 전환하기로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이는 청소년운동의 몇몇 단체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판단과 함께, 더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그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

● 2013년

학생인권조례에 관련된 활동은 2013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특히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청소년활동가들이 서명을 모아서 제출하고 집회를 여는 등의 행동에 나섰다. 2013년 초, 전라북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안에서 종교의 자유, 강제자율학습 금지, 성적 지향 차별금지 내용 등을 삭제하고 제정하려고 하여 청소년활동가들은 도의회를 점거하고 제대로 된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활동 끝에 2013년 여름 비교적 다른 학생인권조례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제정되었다. 다만 두발자유 등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것 때문에 상위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애초부터 제대로 들어가질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수 반동적인 반응은 계속 이어졌다. 말했다시피,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장이 두발 및 용의복장에 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권한이 있다는 식의 해석을 내놓으며 학생인권조례 중 두발복장자유 관련 항목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충북 학생인권조례 역시 주민발의가 성사되었으나, 이러한 상위법을 이유로 들며 도교육청이 의회 상정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교육부는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다. 충북 <교총>에서는 이 시기 벌어진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연관지어,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만든 것이 충북 내란음모와 연관성이 없나 조사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공식 발표하는 것이나 동성애 차별금지를 이유로 반대하는 등, 학생인권을 정치적·도덕적으로 불온한 것으로 낙인찍려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청소년운동은 이에 맞서서 조례가 제정된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정착되고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례를 조사하고 캠페인을 하는 활동을 했으나, 많은 역부족에 부딪혔다. 전국적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전국 학생인권 운동의 현황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기획하고 전국 단위로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며 운동 내외적으로 연대와 이슈화를 담당했다. 2013년 시점에서, 청소년운동은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에 대해 대처하고 어느 정도 합의된 제도를 만드는 것은 환경에 따라 가능했지만, 학생인권의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전국적이고 보편적으로 정착시킬 힘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일진일퇴가 벌어지는 가운데 청소년운동은 활동 의제를

확대해나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 형성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모임은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이라는 단체로 발전했고,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은 2013년 봄 “나는 처녀가 아니다 - 청소년 섹슈얼리티에 대한 발칙한 선언” 운동을 전개했다. 이는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성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페이스선언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청소년을 무성(無性)적인 존재로 보는 것에 저항하는 내용으로 SNS와 언론 등을 통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온라인게임 청소년 섯다운제를 반대하면서 활동해온 게임규제에 관한 논의도 더욱 나아갔다. <아수나로>는 <사단법인 오픈넷> 등과 연대하여, 청소년에게 본인확인 과 부모/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을 제기했고, 소위 ‘중독법인’(4대 중독 예방법. 이 중 온라인게임을 약물이나 알콜이나 도박과 같은 종류의 중독물질로 넣고 다른 온갖 콘텐츠를 중독물질로 규정할 길을 열어놔서 논란이 되었다.)에 대해 반대하면서 <게임규제공대위>에 동참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운동은 게임에 대한 청소년 인권 관점에서의 입장을 가다듬어갔다. 다만 <아수나로>는 게임산업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으나 역량의 부족으로 대외적으로 크게 알리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 1년차로서 많은 사회경제적 이슈가 있었다. 하반기에는 철도민영화 추진과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시작해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운동이 일어났다. 여기에 청소년들도 상당수 참여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징계하거나 대자보를 철거, 훼손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정부에서도 노골적으로 대자보를 규제하라고 지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운동 단체들이 이에 대해 사례를 수집하고 문제제기하는 활동을 벌였다.

2013년 이후, 학생인권조례 등의 전국적 진행 상황도 담보 상태에 빠졌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 사회 전방위적인 보수화와 전체적인 사회운동의 침체는 청소년운동의 여건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반발하여 행동하는 청소년들도 나타났다. 

2. 청소년운동,
현재의 정체성 탐구

청소년
운동의
'정치성'
변화에
대하여

먼저 사전 설명을 하자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치'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청소년운동이 어떻게 국회에서 썸박질을 했는지, 정당이나 정책결정 등에 개입했는지만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단순히 국가의 사안을 의논·결정하는 과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의견을 내고, 권리를 요구하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운동이니만큼, 정치적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청소년운동은 어떻게 정치적이었을까? 예를 들어, 청소년운동은 다른 운동과 어떤 관계였을까? 청소년운동은 누가 하는 운동으로 여겨지고자 했을까? 청소년운동이 목표로 내세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청소년운동은 청소년들이 겪는 억압, 자신들의 해결하려는 문제의 원인 등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했을까? 청소년운동은 매번 다른 인식을 가진 채 이런 질문과 마주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그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대략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1980~1990년대

"학우여! 비민주적 교육제도 속에서 상실된 우리의 시간과 의지와 소망을 회복하고 진정한 주체로서의 입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필코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코 죽으면 살리니 학우여. 끓는 가슴으로 일어나 이땅에 한줌 민주의 씨앗을 뿌리고 갑시다. 쓰러지지 않을 민주의 햇불을 환히 밝히고 갑시다. 학우여, 죽으면 살리라!"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 명동성당 농성 선언문, 1987.)

보기만 해도 결연한 이 글은 1987년 12월, 노태우 당선 당시 대통령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했을 때 발표된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서고련〉)의 선언문이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까지는 군부독재나 <전교조> 결성 등 운동 전체를 뒤 흔들만한 사안들이 터지던 시기였고, 민주화운동, 참교육운동 등 거대한 운동의 기세가 학교에도 맹렬하게 불어 닥치던 시기였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서고련>과 같은 단체를 결성하며 고등학생 주체의 운동, ‘고등학생운동’을 만들어나갔다.

위와 같은 상황에 있다보니, 고등학생운동은 자연히 다른 운동과 많은 관계를 맺었다. 특히 고등학생과 접촉하기 쉬웠던 대학생, 교사와의 교류가 많았고,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그중에는 활동가 재생산을 위한 조기교육의 장으로 보고 고등학생운동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그래서인지 고등학생운동을 회고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거대담론에 상대적으로 종속되어 청소년 자신의 문제에 소홀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고등학생운동 내부에서 운동의 순수성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있었고, 나중에는 학내 문제로도 운동의 중심이 옮겨갔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운동에 종속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도 <전교조>가 결성될 즈음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모두 졸업하고나서부터 고등학생운동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고 점점 쇠퇴해갔다는 기록을 보면 좀 씁쓸한 마음이 든다.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첫째, 어떤 형태로든 우리 스스로가 집단적인 힘을 가져야만 최소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둘째, 절대로 외부로부터 지도되거나 소수만의 행동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유명한 교수, 대학생, 문화사업자 등등은 절대 우리 '자신'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권리를 찾기 위해,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뭉쳤다는 것이다.

(<학생 인권 옹호와 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교학생 연합 S.U.R.E. (Students Union for Right and Education reform)> 창설을 위한 선언 초안, 2000년 3월 10일.)

고등학생운동 이후 간간히 명맥을 이어가던 동아리/단체들 역시 참교육운동, 통일운동 등에 대한 지원적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고등학생운동과는 다른 기류의 움직임이 PC통신상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최우주 씨의 헌법 소원에서 시작되어 하이텔·나우누리 <중고등학생복지회>(<학복지>), 그리고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전학연>)으로 이어지게 된다. 위 글은 바로 <전학연>이 창설될 당시에 쓰인 창설문의 초안이다.

이 즈음에 주목할 만한 점은 1980~1990년대에 비해 다른 운동과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저 접점 없이 데면데면했던 것이 아니다. 이 당시를 회고하는 글 중에는, 회원들이 성인 단체들에 대해 적대감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도 있을 정도다. 그 글에서는 당시에 날이 서있던 이유가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을 이용하려는 기업가, 정치세력, 다른 운동 등으로부터 운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단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심하면 청소년들의 순수성이나 '물들지 않은' 비정치성에 강조점을 두고 비청소년들에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인 경우도 있다.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청소년운동 자체의 이슈에 집중하려는 경향은 다

른 운동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단체의 지향과 운영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학복회> 등 1990년대의 청소년운동은 이전 시대의 고등학생운동과는 달리 이론적·물질적 기반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고, 운동을 거의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이 세워나가야 했다. 물론 이는 독자적인 운동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그와 동시에 청소년인권에 대한 이해도 지원도 부족하던 당시의 사회적 한계를 정면으로 맞닥뜨리며 훨씬 더 멀고 험난한 길을 택한 것이기도 했다. 비슷하게, 2000년대에 만들어진 <전학연>은 명확한 활동 원칙과 사상, 조직 체계를 만들고 직접 행동하고 대중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하면서도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비청소년들의 참여를 꺼려하고 다른 비청소년 조직들과 연대하는 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다. 이런 모습은 운동 초기에 청소년과 비청소년간의 권력 차이 문제, 그리고 사회적 비난에 대한 문제 등으로 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청소년운동 자체의 이슈에 집중하려는 경향은 단체 구성원의 자격 조건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전학연>에서는 비청소년인 구성원을 구성원으로서 인정해야 하는가, 인정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적도 있었다. 청소년은 나이를 먹으면 비청소년이 되어 청소년 억압의 당사자성을 잃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은 단체의 정체성과 역량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2000년대 이후

보통 청소년 단체들은 "두발자유화", "네이즈 반대"같은 우리 청소년들과 아주 밀접한 사안들만을 외쳐 왔습니다. 진청련이 그런 얘기"만" 한다면, 굳이 저희는 진청련으로 따로 뭉치지 않았을 겁니다. 진청련은 진보적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화, 정치화를 위한 모임입니다. (...) 이럴 때는 어떤 작은 생의 목소리, 어떠한 미미한 살림의 외침이라도 절실하고 절박하고 필요되는 것입니다.

(<진보적 청소년 연합> 소개 글, 2004)

물론 청소년운동은 그 출발부터 사회체제를 변혁하려는 운동으로서 분명한 정치적 지향성을 갖고 있었다. 다만 여건에 따라 양상이 다른 것 뿐이었다. 2000년대 이후로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고 청소년 이슈 외에도 다양한 ‘진보적 의제’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년운동의 양상도 점점 다양해졌다.

2004년에 쓰여진 <진보적 청소년 연합>(〈진청련〉) 소개 글에서는 친일규명법, 비례대표제 등 청소년 의제 외의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진청련〉을 “진보적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화·정치화를 위한 모임”이라고 소개하면서, 가슴이 콕 막히는 어른들의 개수작이 난무하는 지금 청소년의 목소리가 상식의 목마름을 겪는 이 시대에 물방울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런 경향은 진보정당 내에서 꾸려진 청소년위원회(준비모임)들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10년에 만들어진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은 정식 인준을 받기 위해 준비하면서 명동의 ‘카페 마리’의 강제철거 투쟁이나 희망버스, 여의도오큐파이 등 여러 의제의 운동에 함께 연대했다.

청소년운동 외의 이슈와 운동에 빈번하게 참여·연대한다고 해서 이들의 모습이 고등학생운동으로 완전히 되돌아갔다고 할 수는 없다. <진청련>이나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은 운동의 대상이나 당사자로 학생뿐 아니라 제도권교육 밖의 청소년을 포함시켰으며, 거대담론이나 연대활동의 영향을 고등학생운동에 비해 덜 받아들였고, 조직의 형태 역시 고등학생운동 당시의 단체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현재까지

10. (청소년운동의 고유성)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운동만의 문제 의식과 고유한 영역을 가진다. 청소년억압은 다른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의 관점에 의한 정세 판단과 가치 기준, 우선순위를 갖고 활동한다.

11. (청소년운동의 연대성) 청소년해방은 인간해방과 분리되지 않는다. 청소년억압은 우리 사회의 각종 억압적인 구조와 제도,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운동은 우리 사회의 인간해방을 위해 함께 투쟁한다. 그리고 인간해방과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위해 청소년운동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한다.

(2015 청소년활동가 선언, 2015.)


2000년대를 넘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운동은 더욱 넓고 다채로워졌고, 과거의 고민들은 청소년운동 내부에서 이어지기도 하고 잊히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학생회 운동을 표방하며 2005년 만들어졌던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는 ‘비정치성’을 표방하였고, 2008년 촛불정국 당시 결성되었던 <전국청소년학생연합>은 운동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청소년이 된 회원들의 활동 자격이 상실되면서 단기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2006년 공식 출범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아수나로〉)는 기본원칙에서 “아수나로는 철저히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합니다.”라고 원칙을 세웠고, 실제로 다른 운동을 청소년운동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서 연대와 참여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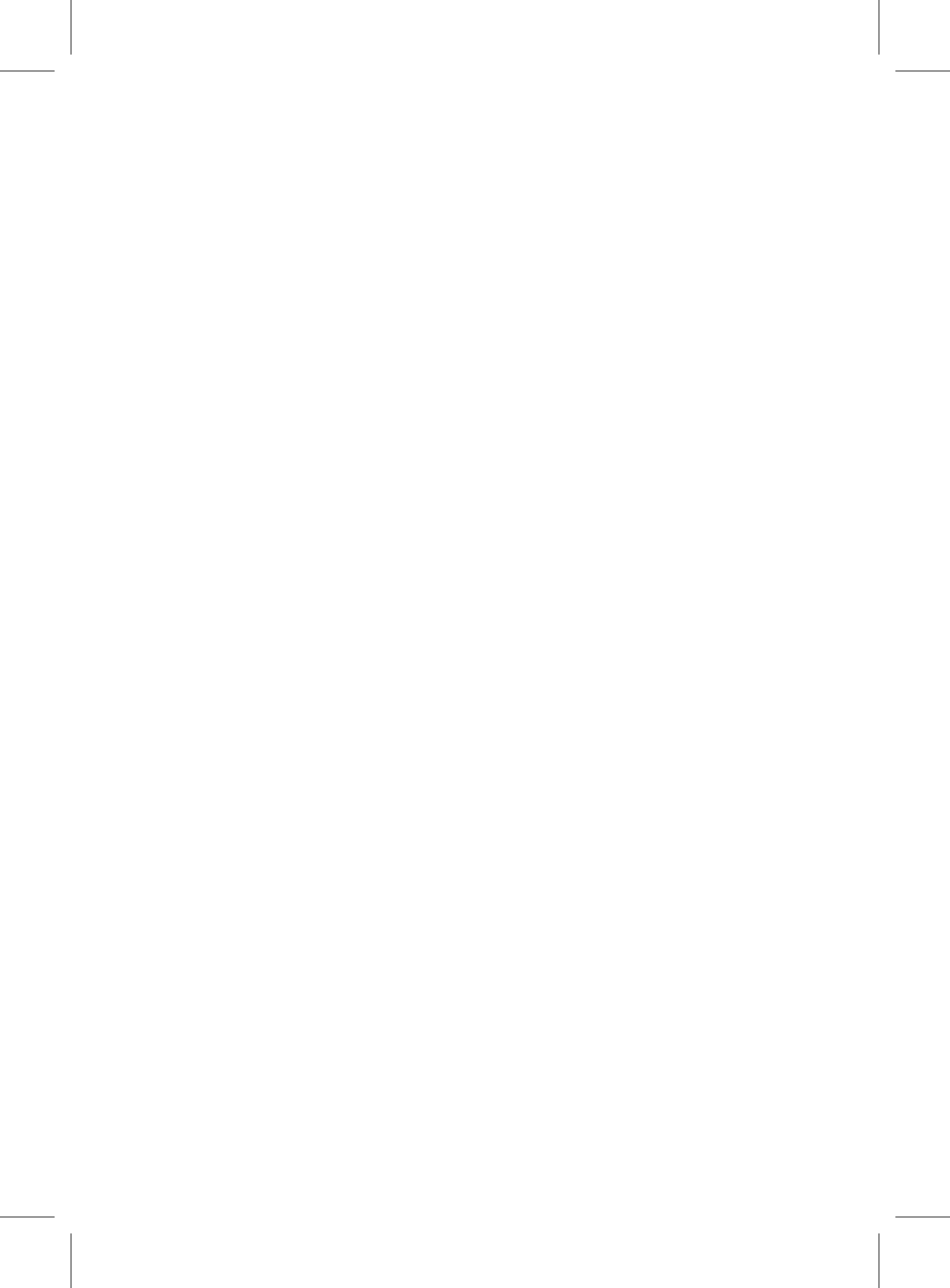
2015년 초에는 지금까지 이어져온 고민들을 청소년운동의 이름으로 정리하기 위해 ‘청소년활동가마당’이 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대다수가 채택한 내용이 ‘2015 청소년활동가 선언’으로 정리되었다. 이 선언은 현재의 청소년활동가들이 자신의 독자성과 다른 운동과의 연관성 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일 것이다. 2015 청소년활동가 선언에 의하면 청소년운동은 비정치성을 주장하거나 다른 운

동과의 무관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연대의 필요성과 전체 사회구조와의 연관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운동에 고유한 정치성이 있음을 선언한다.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는 활동가 개개인과 단체의 성향에 따라 다를 테지만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는 어느 정도 공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정치의식은 2000년대 후반 즈음에 구체화되었지만, 과거의 경험과 논의가 축적되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고등학생운동은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민주화운동·변혁운동의 일부로 자신들의 운동을 위치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 시대 청소년운동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 청소년인권 현실과 교육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전체 민주화운동이나 다른 운동과 별개로 청소년들의 독자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청소년운동의 상황과 사회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현실과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 청소년운동은 더 광범위하게 연대하고 정치적 힘을 가지는 운동을 만들려 했다.

청소년운동의 독자성이나 비정치성을 강조하던 경향성은 운동의 가능성을 제한하며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운동을 만들기 어려웠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청소년들의 삶의 현실과 멀어질 위험도 있었다. 반면 청소년운동의 진보성이나 사회구조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던 경향성은 청소년운동이 고유의 의제를 제기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갈 역량을 낳지 못했고 다른 조직이나 거대한 사건에 쉽게 좌우되는 운동을 만들곤 했다. 또한 기성의 운동 조직들은 내신등급제 문제나 청소년 참정권, 나이주의 문제 등에서 청소년운동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내기도 했고 다른 이해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두 가지 경향성 모두 최종적인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이런 역사를 딛고, 청소년운동은 사회의 보수적인 통념을 극복하여 다른 운동 및 정치와의 적극적 연대를 열어놓으면서도 운동의 독자성을 추구하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이고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으면서 다른 운동에게는 밭보이기까지 하는 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결과가 될 위험도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운동은 그 길을 걸어가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간 역사는 또 미래의 청소년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청소년 운동 총론

1. 청소년운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의 권리를 주장하고 청소년 억압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저항적 성격의 운동이다. 주로 사회에서는 ‘청소년 단체’ ‘청소년 계’ 등의 단어를 청소년을 비청소년이 선도, 보호, 육성하는 성격을 가진 단체 및 운동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청소년의 해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청소년의 저항과 청소년의 인권 보장이며, 비청소년 중심의 사회에 청소년을 길들이기 위한 활동은 청소년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청소년운동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사회적 구분에 의해 정해진 계층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14~19세 정도인 사람,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나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청소년으로 여긴다.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권리와 의무를 다르게 규정하는 제도들도 대부분 만 19세 혹은 18세를 기준으로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구분한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청소년(미성년)이라는 위치를 부여 받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운동의 과제로 놓는다.

청소년이 겪는 차별과 억압 문제는 인간을 생물적 나이로 분류하고 나이에 따라 역할을 배분하며 나이를 기준으로 가질 수 있는 자원과 권리에 차별을 두는 전사회적 구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운동은 청소년 당사자의 권리를 요구할 뿐 아니라
나이가 적음을 근거로 한 차별적 구조 전반을 문제 삼는다. 그래서 청소년운동은 나이주
의적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2. 청소년억압의 성격

청소년억압은 단지 개개인들의 의식이나 고정관념의 문제만은 아니다. 청소년억압은
소수자에 대한 다른 억압들처럼 경제적, 정치적, 사회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생겨나고 강
화되며, 청소년억압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토대이다.

이 사회에서 청소년은 국가와 자본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여겨지며,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수단, 또는 미래를 준비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받는다. 청소년억
압은 신체적·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을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맞춰 사회화시키는 과정
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사회에서 청소년억압의 대표적인 사회구조는 학교와 가족이
다. 학교제도는 청소년이 자본주의적인 경쟁 및 차별 논리, 능력주의를 내면화하고, 권력
에 복종하는 국민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다. 현 가족제도는 청소년을 친권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만들고 양육과 생존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계급을 재생산한다. 학교와 가족뿐
만 아니라 비청소년 중심의 각종 제도와 문화 역시 청소년이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가 되
도록 일조한다.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분리하여 역할과 권리를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시스템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아동기’라는 개념은 근대 자본주의 세계의 발달
과 함께 등장했다. 그 전까지 성인과 구분되지 않았던 아동들의 특성을 ‘순진무구함’ 등으
로 규정지면서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동시에 어른들의 세계와 권한으로부터 차
단되어야 할 존재로 만들어져왔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현대적 핵가족 중심으로 가족
제도·문화가 재편됨에 따라, 아동은 부모의 보호와 훈육 하에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심
리적으로 종속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현대적 공교육의 확대는 모든 아동들이 특정
시기동안 국가가 부여한 ‘학생’이라는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특정한 청소년 상(象)에 부
합하는 인간이 되도록 교육받게 했다. 오늘날 청소년은 비청소년과는 매우 다른,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며, 기존 사회-즉, 어른의 사회-에 아직 길들여지지 않아 미성숙하면서도

위험한 타자로 여겨진다. 현대 가족·학교를 포함한 사회구조는 청소년을 비청소년의 세계로부터 분리하고 있으며, 청소년기에 할 수 있는 경험과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고, 제도적·사회문화적인 무능력, 무권리 상태에 머물게끔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장유유서' 등 나이에 따른 위계를 강조하는 유교문화가 잔존하는 사회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현명하고, 더 권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사회문화 전반에 유효하다. 부모자식 간의 수직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효도 사상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학대조차 정당화되는 한국 사회문화의 기반을 제공했다. '군사부일체'는 통치자와 교사, 부모가 피통치자, 학생, 자식에 대하여 권위를 가진다는 수직적 인간관계관을 전제한 사상이다. 교사가 '선생님'으로서 유난히 많은 권위를 누리고 교사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가 정당화되는 문화는 그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억압은 군사주의와 국가주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군사주의는 "군인의 이데올로기가 전 사회 속에 파고드는 현상"(라스웰Lasswel), 혹은 "전쟁과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활동으로 보이게 하는 태도와 일련의 제도들"(마이클 만Mann) 등으로 정의된다. 한국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군사주의는 군인식의 문화와 이데올로기가 사회 속에 파고든 대표적 사례이다. 학교의 두발규제나 제복(교복) 착용, 여러 집단적 생활 통제, 또한 각종 기합 및 체벌, 수직적 상하관계 등은 많은 부분 군대식 문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은 기나긴 일제식민지 시기와 반공을 내세운 군사독재 시절 동안 학교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수련회에서의 군사 훈련이나 노골적인 '군대 체험 캠프'도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으며, '군대'는 청소년들을 훈육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도 서류상 존재하는 '학도호국단'(학교 학생들을 전시에 군대식으로 편성하는 제도) 등의 제도는 국가가 국민을 예비 병력으로 상시 관리,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입시경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사람들을 통제, 억압하는 것을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처럼 인식하는 몇몇 학교들의 (다른 학생들을 '적'으로, 입시를 '전쟁'으로 칭하며, 수능을 앞두고 '수능출정식'을 치르는) 모습도 군사주의에 기원을 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주의는 군사주의보다도 한층 더 의심 없이 널리 퍼져 있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이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학생에게 강요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등은 학교가 국가주의를 재생산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도덕 교과 등에서는 획일적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전수하며, 학교 안팎에서 개최되는 애국심, 민족의식, 국가

안보, 통일 관련 백일장, 표어,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정답을 전제하고 우열을 가린다. 최근에는 국가보훈처의 주도로 학교에서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가 강제되는 각종 의례들은 청소년들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며, 이러한 '애국심'을 하나의 도덕으로 격상시키는 풍토는 종종 개인의 인권을 경시하는 문화를 낳게 된다. 실제로 "경쟁을 통한 국력 향상, 인적 자원 개발, 경제발전" 등의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입시교육이나 각종 청소년억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하고 있다.

3. 청소년운동의 의제

2000년대 이후, 청소년운동에서 다루어 왔던 청소년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인권

학생인권은 청소년운동에서 가장 오랫동안, 주되게 다루어 온 의제이다. 한국의 학교 문화는 학생에 대한 하대, 학생-교사 및 학생-학생 간 위계질서, 입시경쟁, 체벌 및 모욕적 처벌, 감시와 통제, 사생활에 대한 간섭, 개성 말살과 획일화된 인간상 요구 등으로 얼룩져 있다. 학생인권의 문제는 청소년을 열등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하는 사회 상황과 경쟁적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두발자유운동은 한국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의 자유를 요구했다. 점차 일부 학교에서 두발 관련 규정을 약간 완화하는 결과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학교 내 두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것은 학생의 두발자유를 명시한 지역별 학생인권조례가 청소년운동을 비롯한 운동의 힘을 기반으로 2011년 전후로 제정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두발 길이만 자유로 두고 펴거나 염색 등을 하는 것은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은 두발자유운동이 10년째가 되는 해이지만 아직 학교 내 두발자유는 찾아오지 않았다.

교사에 의한 체벌 폭력 문제 또한 지역별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는 학교 내 체벌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었으나,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직접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상당수 학교에서는 체벌을 금지하는 학칙을 신설하게 되었고, 여전히 교사에 의한 체벌 폭력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비교적 음성적으로 자행되는 상황이다.

과중한 학습시간, 강제로 하게 되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등 학생의 휴식과 여가를 빼앗고 과로하게 만드는 교육정책, 학교별 교칙, 교육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청소년운동의 중요한 의제이다. 종교학교에서의 종교 강요-예배 참석 강요, 믿음 강요 등-를 당한 학생들의 문제제기와 종교 강요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에도 청소년운동이 함께했으며,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압수하는 학교 교칙, 교내 스마트폰 이용을 감시, 통제하는 어플리케이션 의무화에 대한 반대운동 등 또한 진행했다.

2) 교육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청소년에게 과중한 학습을 의무처럼 강요하고 있고, 공교육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기존 사회에 순응하기 위한 교육을 공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극화된 사회에서 대학 서열과 입시 경쟁의 문제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를 만큼 심각해지면서, 청소년이 받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자 괴로운 노역이 되어 버렸고, 입시 공부 외의 다른 청소년의 활동은 금기시되고 입시 성적에 따른 인간 분류와 차별은 청소년에게 일상이 되었다.

청소년운동은 입시 폐지와 대학 평준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전국적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를 서열화하는 일제고사 반대 운동을 진행했고, 수능을 비롯한 입시를 거부하는 운동도 진행해왔다. 교육의 문제는 청소년 인권 전반에 걸친 문제여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강요와 같은 강제학습 문제는 직접적으로 한국 사회의 교육 구조와 관련하여 있고, 비인간적인 학생 통제 등 대부분의 청소년 인권 의제들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유에 대한 문제들이 청소년 시기가 아직 공부만 해야 하는 때로 규정지어지는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발생하기도 하고, 입시 공부 외의 활동이 시간 낭비로 여겨지는 문화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및 사회운동 참여를 어렵게 한다.

3) 정치적 권리, 참여할 권리

2013년부터 선거권은 만 19세부터 부여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만 20세 이상에
제한 부여되었다.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경우 25세 이상, 대통령선거는
40세 이상부터 부여된다. 차별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의 원칙은 현대 민주주
의 정치의 핵심적 원칙이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 계층은 시민으로 인
정받지 못하는 계층이다.

청소년운동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주
장해왔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뿐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 학교 민주화 및 학교운영회의 학
생참여와 관련한 의제들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제이다. 청소년운동에서는 청
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시위와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 선거철에 맞춰 청소년
이 참여하는 모의 선거를 치루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지역 행사를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
는 식으로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요구하기도 했고, 제도 위원회 및 참여단에 청소년
참여를 요구하고 조직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4) 여성 청소년과 소수자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 집단은 모두 청소년으로써 억압을 겪지만, 청소년 집단이 모두 단일하거나 균
등한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인 동시에 소수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이중적
으로 억압받는데, 청소년운동이 주목해왔던 집단은 여성 청소년과 성소수자 청소년, 탈학
교 청소년 등이다.

페미니즘의 문제의식과 연결 지어 청소년운동은 여성 청소년이 ‘어린 여성’으로서 겪
는 폭력과 차별 문제, 학교 내 성이분법·성차별적 규칙과 관행, 순결 강요 문제 등에 목소
리를 내왔다. 다만 청소년운동에서 여성 청소년 의제를 전면에 내건 사업들은 언론 기고,
소규모의 캠페인 및 시위 등이었고 연속적이거나 큰 규모의 사업은 부족했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겪는 폭력과 차별 문제에도 청소년운동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
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 등에서 보수 세력이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자주 ‘성소수자 차
별 금지 조항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몰들인다’는 논리를 차용했기 때문에, 청
소년 중에는 성소수자인 청소년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성소
수자를 나쁜 존재로 상정하는 것은 폭력이며 차별임을 주장해왔다.

탈학교 청소년의 문제도 청소년운동의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 탈학교 청소년이 부도덕하거나 무서운 존재로 여겨지는 사회적 인식은 기존 사회의 억압적인 청소년상을 그대로 반증하는 현상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운동을 하는 활동가 중 상당수가 탈학교 청소년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복지가 학생 중심으로 맞춰져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부족한 지점,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 학교 밖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교육권 등이 청소년운동이 지적해온 내용이다.

5) 문화적 권리와 성적 권리

청소년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전제는 제도적, 문화적으로 청소년의 정보접근권을 부정하는 전제가 되었다. 모든 영화, 게임, 도서, 영상물 등 매체들은 12, 15, 18, 19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접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도적으로 심의 받는다. 이 심의 절차는 심의기관의 몇몇 관료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진행되며, 외국에 비해 지나친 연령 제한은 사회적 비난을 사기도 한다. 청소년이 접근하면 안 되는 매체는 보통 성과 관련한 선정성과 폭력성을 기준으로 정한다. 청소년에게 성적인 매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심의 기준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간주하지 않는 전제로 정당화되고, 폭력적인 매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심의 기준은 청소년이 미성숙하여 판단 없이 폭력을 모방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정당화된다. 청소년에게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사회는 ‘콘돔’이라는 단어를 성인인증이 필요한 검색어로 설정한 포털사이트를 만들어냈고, 어린이 및 청소년 배우가 자신이 출연한 영화를 합법적으로 관람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에게 특정한 매체와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 이후에 게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나왔을 때 이를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졌고, 비슷하게 청소년의 문화 접근을 규제하는 정책이 나올 때마다 청소년운동은 반대 입장을 공표해 왔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는 정보접근권과 깊게 관련이 있다. 성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관계, 피임, 의사소통, 섹슈얼리티 등에 대한 정보인데 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거나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와 어른들에 의해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가 자주 부정되기 때문이다. 보수적이고 순결을 강요하는 학교 성교육의

문제도 청소년의 성 정보접근권과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연애를 처벌하는 학교 규칙과 청소년의 성적 실천에 낙인을 찍는 사회 분위기는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들이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알리는 활동들을 해왔다.

6) 청소년 노동권


학교와 연계된 현장실습에서의 청소년 노동착취 문제와 청소년 임금노동자가 겪는 각종 노동권 침해들은 청소년운동이 주목해온 부분들이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 노동자들이 특히 겪게 되는 임금체불, 최저임금제 위반, 노동현장에서의 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증언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해왔다. 청소년이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일자리밖에 갖지 못하게 되는 사회구조,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근절론’과 ‘보호론’이 있다. 근절론에서는 아동 노동의 금지를 주장하며, 청소년이 임금노동을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호론에서는 청소년의 노동을 금지하지 않고 노동권 침해가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동할 권리’와 ‘노동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만 15세 미만 노동금지’, ‘만 18세 이하 보호자 동의 요구’ 정책은, 청소년이 노동을 할 자기결정권을 부정함으로써 청소년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비공식, 저임금 일자리로 몰리는 상황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경제적 독립을 옹호하면서 착취 없는 노동, 임금노동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7) 반나이주의

나이주의는 청소년운동이 규정하는 이 사회의 구조이고, 반나이주의는 청소년운동의 주요한 기조이다. 나이주의란 나이에 따라 사람의 역할과 권리, 의무를 다르게 부여하고 차별하는 구조와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를 포괄한다. 나이주의의 영문 번역어인 ‘Ageism’은 서구에서는 노인 등 고연령층이 겪는 차별 문제를 설명할 때 사용해왔기 때문에 아동

과 청소년이 겪는 나이주의 문제는 외국에서도 잘 체계화되거나 공식화되지는 못해왔다. 때문에 나이주의를 분석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은 늘 청소년운동이 과제로 삼아온 일이고, 내부적인 이론화작업과 언론 기고 및 출판 등을 통한 외부화 작업을 조금씩 시도해왔다.

운동사회 내 나이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청소년운동은 목소리를 내왔다. 청소년운동이 아닌 다른 시민사회운동에서 나이주의적 폭력, 차별, 청소년에 대한 배제의 문제가 종종 불거져왔고, 청소년운동은 운동사회에서 나이주의를 발견하고 문제제기하며 해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우물모임
좌담회 :
청소년운동,
인권,
나이주의

좌담 일시 : 2015년 10월 11일
참가자 : 두요, 호야, 필부, 공현

오늘날의 청소년운동에 대해 우물모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은 활동가들이 모여서 좌담회를 했다. 좌담은 청소년운동을 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인 ‘나이주의’, ‘인권’ 등을 이야기하며 이루어졌다. 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여 현재 청소년활동가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Part1. 청소년운동과 청소년인권운동

두요 : 먼저 ‘청소년운동’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경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자.

공현 : 청소년운동이라고 하면 우리 같은 단체가 아니라 보이с카우트, YMCA 같은 곳들과 혼동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인권운동이라고 부른 지 꽤 오래 됐고. 요새는 그냥 우리가 ‘청소년운동’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생각한다.

필부 : 보이с카우트 같은 데서 어떻게 스스로를 ‘운동’으로 생각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호야 : 청소년을 잘 이끄는 어른들의 운동 같은 게 아닐까? 어쨌든 보통 ‘청소년단체’라고 하면 학교 같은 데서 생각하는 것은 그런 단체들이다. 청소년들에게 좋은 것들을 알려주거나 경험시키는 것.

그런 게 청소년운동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권’을 붙여서 부각시킬 수 있고, 그런 구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 더 뚜렷하게 해주는 것 아닐까 생각했다고 우물모임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나도 그런 의미에서 ‘인권’을 붙여서 붙였다. 또, 우리의 활동이 여러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간결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사람들에게 막연히 ‘좋은 가치’로 인지되는 ‘인권’을 우리 운동을 설명하는 편리한 도구로 써온 것 같기도 하다.

우물모임에서 한 논쟁에서 기억에 남았던 건, 다른 인권운동, 정체성운동에서는 굳이 ‘인권’자를 넣지 않는다는 거였다. 굳이 여성이나 장애운동을 여성 ‘인권’ 운동, 장애 ‘인권’ 운동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그 정체성 자체를 가지고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길 듣고 ‘어, 진짜 그러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청소년운동도 인권 자를 붙일 필요는 없겠다는 나름의 판단이 생겼던 것 같다. 인권 떼고 청소년운동, 청소년단체 이렇게 말을 해보니 또 입에 잘 붙더라. 물론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운동이 보편적으로도 청소년운동으로 생각될 수 있도록 하려면 꾸준히 보이/걸스카우트 같은, ‘청소년단체라고 하면서 전혀 청소년이 중심이 돼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들’을 비판하고 그와는 다른 활동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지만.

공현 : 역사성이 있다. 90년대에 학생인권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도 당시 활동가들이 딱 청소년 또는 학생인권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개념이 명확하게 있진 않았다. 그러던 게 2000년대 중반에 와서야 청소년인권운동이란 개념으로 확실하게 쓰인다. 아까 말한 그런 청소년단체들과 구분을 지으려는 것도 있다. ‘인권’을 붙이게 된 데에는 현실적으로 인권운동이 청소년운동의 지원 세력이 되어준 영향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다루어온 문제들이 다 인권 문제이기도 했고. 이런 역사적 맥락 때문에 ‘인권’을 떼어도 되는지 고민은 된다.

그런데 사학비리라든지, 딱 인권의 카테고리로 분류된다고 하기에 애매한 부분도 있긴 있다.

필부 : 애초에 인권 카테고리가 뭔지 모르겠다.

공현 : “이건 청소년들의 이러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문제입니다” 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두요 : 초장부터 너무 크고 본격적이고 근본적 질문을 던진 것 같아서 좀 후회스럽다. 그러면 필부는 청소년운동과 청소년인권운동이 가지는 구분이 모호하다는 건가?

필부 : 아. 사실 인권이란 건 되게 넓으니까, 어떤 문제든 어떻게든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공현 : 인권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쓰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게임 섯다운제도 청소년의 수면권이나 건강권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잖나.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인권이란 게 보수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고, 청소년·아동 관련해서는 특히 보수적으로 쓰여 온 역사가 있다. 보수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이들에게 인권이 주류적인 언어는 물론 아니었지만, 그들도 인권을 언급하긴 했다. 사실 주류적인 국제인권 규범 같은 데서의 청소년인권 논의도 우리가 다른 게 분명히 있잖나. 아동노동, 보호주의, 가족에 대한 관점과 같은 것들. 사회적·역사적 맥락의 문제가 더 큰 것 같다. 다만 인권이란 논리 체계가, 자유·평등 같은 가치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에 책임을 요구하고 사람들의 연대를 요청하는 등 특정한 지향성을 갖고 있긴 하다. 그런 것들을 청소년운동이 빌려온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인권의 효과는 좋은가 나쁜가

공현 : 근데 인권 개념이 하나의 장벽이 되는 것 같지는 않나? 인권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인권활동가란 이름으로 뭔가 하는 사람들은 UN 같은 데에서 일할 것 같은 느낌. 꼭 그게 아니어도 헌신적이어야 할 것 같고, 착한 사람만 할 것 같은 이미지?

필부 : 송고하고, 대단하고.

공현 : 거칠게 표현해서 '범생이' 같다.

두요 :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인권 개념이라는 게 공현이 말한 이유에서 청소년운동에 있어선 몇 가지 장벽으로 작용을 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한다. 근데 또 이 운동의 구심으로 작용하는 게 인권적 논리라든지 그런 것들이라서 놓치고 싶지 않다.

필부 : 자신이 인권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인권이란 건 숭고하고 대단한 건데, 이런 좋은 것을 어떻게 전파할지 고민하는, 계몽시키려는 느낌이랄까. 전파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건 좋지만, 우리가 숭고하고, 희생을 하는 것만은 아닐 텐데...

호야 : 처음 청소년운동 시작할 때와 지금이랑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같다. 지금 나한테 인권은 청소년의 행동을 해석하는 틀 혹은 청소년과 만나는 방식이라는 느낌이다. 인권을 청소년에게 알려줘야 한다기보다는.

공현 : 이중적인 게 있다. 부모들에게 얘기할 때, 가령 “나 청소년 사회주의조직에 들어갔어.” 하는 거랑 “청소년인권단체에 들어갔어.” 할 때 결과가 다를 것이다. 인권이란 말이 만들어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인권운동이 아니라 청소년운동, 청소년단체라면 청소년이기만 하면 활동해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인권에 대해 딱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호야 : 인권이라는 용어가 도덕이랑 크게 구분되는 것 같진 않다. 우리가 생각할 땐 도덕과 인권이 다른 부분이 많지만, 사회적으로는 대충 <인권 =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모호한 느낌 정도만 있는 듯하다. 물론 ‘누구’의 인권이냐에 따라 논쟁적이긴 하지만,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로만 보자면.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좀 아닌데 하는 것도 섞여 있기도 하고.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인권이라는 말을 정의한다고 할 수 있도록 인권이라는 말을 벗어날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는 것 같다.

필부 : 청소년운동이라는 말 대신 청소년인권운동이라는 말을 썼던 이유 중 하나가 YMCA 같은 단체와 구분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다른 운동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공현 : 장애인운동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장애인운동에서도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 복지서비스, 치료, 보호 같은 것을 제공하면서 자라들이 ‘장애인계’라고 얘기하는 재단과 세력들이 존재한다. 계속 갈등을 겪는 걸로 알고 있다.

인권 너머로 나아가는

두요 : 내가 인권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가 고민하게 된 건, ‘사형’과 ‘학교 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었던 것 같다. 범죄자 혹은 가해자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한국에서는 여론이 절대 좋지 않잖나. 인터넷 댓글을 보면 인권단체에 대한 대중들이 이미지는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도인 것 같아서 억울하고 짜증났다.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인권을 벗어나야 하나 아니면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여론을 만들어야 하나 고민했다. 또, 인권이란 개념을 제대로 대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창구는 뭐가 있을까.

호야 : 뭐가 인권이냐고 했을 때는 사람마다 답이 제각각일 텐데,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그걸 인권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사회적인 개념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에 뭐가 들어갈 거냐 하는 고민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공현 :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인권’자를 빼고 싶다니 어떤 활동가들은 서운해 하더라. 인권이 없었으면 청소년운동이 여기까지 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인큐베이터 같은 건가 생각했다. 인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체성을 만들고, 활동가를 만들고.

두요 : 사실 인권과 청소년운동을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만으로 좀 괴롭다. 인권을 떼면 우리의 논리가 빈약해지지 않을까?

호야 : 인권을 기반으로 운동을 하는 건 맞는데 좀 더 구체적인 권리를 제안해야 하

지 않을까 싶다. 인권이라는 말이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기에 쓰기에 편리한 것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게 인권이라고 생각한다고 계속 운동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냥 ‘좋은 거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우리는 그 차이를 부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을 어찌 보면 수단처럼 쓰는 거긴 한데.

공현 : 인권을 뺀다는 게 이름에서 뺀다는 거지, 인권의 담론이나 논거를 포기한다는 게 아니다. 인권도 하고 그 이상의 것도 하는 운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필부 : 인권에만 중심을 두지 않는다는?

공현 : 교육과정을 정하는 과정에 학생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참여해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내용을 말하는 데는 인권이라는 기준으로는 불충분하다. 청소년운동이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어떤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형성해야 할 텐데, 그건 인권 바깥 영역의 문제가 된다.

필부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 얘기할 때, 청소년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가 ‘아예 참여할 수 없다’에서 ‘형식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다’로,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거나 ‘그 명수가 교사나 학부모의 수와 동일해야 한다’, ‘전체인원의 반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만이 의논해야 한다’까지. 이런 식으로 그 정도가 있잖나.

이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청소년의 인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곤 한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인권이기 때문’이라는 논거의 효과는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인권을 넘어서는 운동이 필요한 건가 싶다.

두요 : 난 인권의 논리가 활동에서 뭔가를 관철해야 할 때 독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좀 있었다. 참정권 이야기를 할 때나 보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 술이나 담배, 선거권 문제 - 를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세 살짜리 애가 담배를 피워도 가만있을 거냐는 식의 얘기다. 그럼 난 속으로는 그 사람들도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까지 말하고 확장해버리면 카오스가 열리잖나.

호야 : 어느 단계에서 이걸 더 얘기하고 관찰시키려고 할 경우 어마어마한 논쟁이 붙을 게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인권이 경합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다. 인권 자체가 대중적인 속성,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논쟁을 촉발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주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운동이 아닐까.

공현 : 아직은 우리가 ‘청소년인권운동’이 아니고 ‘청소년운동’을 한다고 말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언젠가 우리의 청소년운동에서 청소년운동협의회·네트워크를 만들고, 소속 단체가 여럿 되면서 운동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단위를 형성하게 되면, 한국청소년운동단체협의회에 들어있는 단체들에게 “너희 말고 우리가 청소년운동이고 청소년단체인데?”하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인권+알파, 그걸 해방이든 권익이든 뭐라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운동이 되면 좋겠다. 예를 들면 권익이라는 말 좋지 않나, 권리+이익.

필부 :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인권으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것과 인권이라는 논리로 충분히 설득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 더 많은 것들도 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장할 수 있으려나. 그 어느 때가 지금인지는 잘 모르겠다.

호야 : 난 권익에 대한 욕구가 요즘 들어 절실한 같다. 다른 활동가들도 그런 갈망이 있을까. 예를 들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 받던 당시에 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 표현을 앵무새처럼 말했고, 그걸 쓰는데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말만 들어도 맥락에 관계없이 화부터 나고 바짝 긴장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인식이 나에게 없었구나 생각하면 깜짝 놀란다. 당시에 분명 인권이라는 틀을 바탕으로 활동했지만, 청소년운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촘촘하게 ‘인권’이라는 큰 논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난 최근에는 나이주의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응하고 싶다는 욕구가 많은데, 그 부분은 특히 지금 통용되는 ‘인권’이라는 말만으로는 설득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분명 ‘혼돈의 카오스’가 열릴 것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인권이라는 언어 이상의 뭔가를 만들어 얘기하고 씨알이 먹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

Part2. 나이주의 : 청소년운동이 발견한 언어

두요 : 네, 파트 2 나이주의. 여러분에게 나이주의란? 청소년운동이 나이주의를 다루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호야 : 나도 그게 궁금하다. 아수나로나 활기에서 나이주의 사전 만들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 나이주의 팀이라는 대응팀이 있었던데.

공현 : 역사적 맥락을 따지자면, 사실 나이주의 이야기를 한 건 얼마 안 됐다. 예컨대 1980년대의 고등학생운동은 나이주의적인 운동이었다. 고등학생운동의 담론에서 15세면 충분히 성숙하다는 얘기하고, 자본주의에 패악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존재 같은 이야기도 한다. 나이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시작된 것은 학생인권이 아니라 ‘청소년인권’이 화두가 되었을 때나, 선거권 같은 문제에서 나이주의 문제가 부각된 것 같다. 18세면 성숙하냐는 식의 얘기가 되면서.

그런 청소년보호주의나 나이주의 문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07~8년 이후다. 활동가들의 경험 차원으로 말하면 청소년운동이 교육운동을 비롯한 다른 사회운동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연대하는 과정에서 일상 속의 나이주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다. 나이주의가 갈등요소로서 부각된 건 2008년 촛불,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추대위, 일제고사 반대 투쟁 등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이주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내가 2010~11년인가에 <운동사회 나이주의 깨기 운동>을 해보자고 제안했었다.

필부 : 아수나로에서 검색하니까 맨 처음 나이주의라는 제목을 갖는 게시물은 2006년 것이었다.

공현 : 말 자체는 그때도 나왔었다. 다만 그때는 나이주의라는 게 나이 차별이라든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문제를 ‘있어 보이게’ 표현한 느낌이었고, 그 이후에 더 체계적으로 고민했던 듯.

필부 : 판 데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까? 궁금하다.

공현 : 2002~3년쯤 한겨레에서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연령주의>라는 주제로 기획 기사를 쓴 게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연령주의라 하면 고령자 차별을 주로 의미한다.

필부 : 청소년운동에서 다루는 나이주의와 노인운동에서 다루는 나이주의가 별개의 것은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다. 나이를 매개로 한 차별이 어떤 세대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두요 : 나이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령자 차별 중심으로 시작된 건 배경이나 맥락이 있는 것 같다. 미국의 경우는 어린이에 대한 보호주의가 체계적으로 복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새어나올 틈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한국은 보호주의가 팽배하고 만연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청소년이 편하거나 득 되는 것이 별로 없다. 두 사회에는 그런 배경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

공현 : 미국의 경우에 초기에 문제는 고용, 노동시장, 기업에서의 고령자 차별 이런 것들이었고, 한국도 사실 고용상의 연령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고령자 중심이다.

운동사회 나이주의 깨기인가, 전 사회적 나이주의 깨기인가

공현 : 요컨대 나이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짙은 건 2008년 정도부터고, 본격적으로 담론으로 논의한 건 2011년. 그 이후에 고민했던 건, “운동사회의 나이주의로 딱 집어서 하는 게 의미 있을까?” 하는 거였다. 전 사회적 나이주의 문제로 확장해서 얘기해야지 운동사회만 짚어서 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냐는 것.

호야 : 다른 운동에서도 나이주의를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청소년운동에서 나이주의는 좀 더 뭔가 절실하고 핵심적이라는 느낌이다. 청소년이라는 존재가 억압받는 가장 큰 근거가 나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운동이 나이주의에 대해 보다 전면적으로 얘

기할 수 있지 않나. 내가 활동하면서 나이주의를 절실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느꼈던 건 2012~3년 정도였던 것 같다. ‘우리 아이들’ 논란에서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때 나이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청소년운동 내에서도 크게 환기되는 느낌을 받았다.

운동사회의 나이주의 문제 얘기를 해야 하느냐, 전 사회의 나이주의 문제를 얘기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해온 흐름이 있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운동사회부터 뭔가 시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중점적이었다가, 요즘에는 운동사회도 나이주의에 대한 인식은 사회 일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다. 기대를 버렸다고 해야 하나. 특별히 운동사회라고 해서 나이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더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제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공현 : 운동사회나 전 사회적으로 풀어야 하느냐. 예를 들어 운동사회 성폭력 100인 위의 문제제기가 의미 있었던 건, 사회적으로 성폭력이 문제라는 인식이 확장되었고, 법제도도 만들어지고, 그때 성희롱 사건이 이슈화되던 와중에 “그런데 운동사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거든?”하고 꺼내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지금 상황에서 운동사회 나이주의 문제라고 꺼내들면 사람들이 ‘나이주의가 뭐냐’ 할 것 같고, 사람들 다 하는데 왜 활동가들에게만 그러냐는 얘기가 나올 게 뻔하다. 그래서 난 전 사회적인 얘기를 꺼내면서 그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운동사회에서도 그 얘기를 꺼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어느 간담회 기록을 보다가 좀 화가 났다. 누군가가 인권이 너무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게 운동일까 고민이 든다고 한 것이었다. 그 자체에는 난 동의한다. 그런데 그러면서 든 예시가 문제였다. ‘우리 아이들’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하면 그 말을 쓰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없어진다면, 그 말을 쓰지 말라고만 하는 건 그제 왜 문제인지 만나서 얘기할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아서 아니냐고 했더라. 그 말은 사실 과도 다르다. ‘우리 아이들’ 얘기를 처음 꺼낸 계기인 탈핵운동 같은 경우 우리는 간담회도 같이 열어서 만나서 잘 얘기했고 글도 썼다. 난 그렇게 말하는 건 일종의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아,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큰 문제도 아닌데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냐? 그게 왜 문제인지 설명도 못하는 거 아냐?”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아닐까. 사실 ‘우리 아이’란 말을 절대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필부 : 아이들이라는 단어 자체의 찝찝함과 불쾌함이 있기는 하다.

공현 : 누가 글 쓰는데 ‘노동자’라고 안 쓰고 ‘근로자’라고 쓰면 약간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느낌 아닐까. 근로자라는 말 절대 쓰면 안 돼, 이런 건 아닌.

두요 : 이거 명언이다. ㅎㅎ

호야 : 난 근로자라는 말 되게 싫어하는데. (흐린 눈)

공현 : 뭔가 ‘깜둥이’ 같은 차별·혐오 발언과 동급은 아닌 것 같긴 하다는 정도의 이야기다. 운동사회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그런 잠재적인 욕구는 많더라. 만나자마자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나이 적다고 하면 바로 말 놓는 사람들은 너무 싫다는 식의. 그러니까 넓은 지지 기반 속에서 전 사회적으로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호야 :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혐오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

공현 : “여자라고 차별하는 건 싫지만 맘충이나 된장녀는 문제라고 봐요.” 같은 케이스인가.

나이주의라는 키워드

호야 : 나는 지금 청소년활동가들이 나이주의를 공론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누적된 듯 느껴지는 게 있다. 2013년 나이주의 사전이나 활기 간담회 논의 등을 기반으로 대응하는 힘을 키우고 공동 이슈로 만들려는 의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흐지부지되면서 그 욕구를 개인적으로 풀어온 경향이 있어왔고, 만족스러운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한층밖에 안 되는 이 운동에서 나이주의를 어떻게 같이 잡고 가볼까 열른 얘기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나이주의에 관련한 문제의식이나 관련된 부당한 경험은 정말이지 여기저기 널려 있는 상황이고, 반 나이주의적 조직 만들기에 대한 욕구(나이주의 반대 교육 등) 또한 조금씩 생겨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 타이밍에 어떻게 잘 치고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우물에서 다음 주제로 준비하고 있는 나이주의 공부·토론을 잘 준비해서 이걸 바탕으로 나이주의 논의를 잘 풀어가면 좋겠다.

두요 : 나이주의 반대 교육 같은 경우 나도 몇 번 참여했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끈대라는 얘기를 듣고 온 걸 돌려서 얘기한 다음에 “나이주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는 식으로 얘기하곤 한다. 나이주의라는 게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탁해야 하는 주제라는 건 아직까지 명확한 것 같다.

공현 : 청소년운동에게 ‘나이주의’는 페미니즘 운동에서 ‘가부장제’ 같은 거 같다. 그걸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대한 핵심적인 억압 구조이자 이데올로기. 나이주의를 발견한 게 청소년운동에 이득이라는 생각이다. “아, 우리도 보편의 언어가 있어!” 이런 느낌. 청소년운동이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어! 뭔가 이 사회에 청소년을 포함한 모두가 적용받는 요러한 문제라는 얘기를 제시할 수 있는 언어. 처음 얘기할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걸 매개로 다른 운동과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싶다. 노동의 경우도 연령 문제가 많이 드러난다. 청년, 임금피크, 청년실업도 그렇고 페미니즘도 그렇고. 나이주의가 다른 운동과 계속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만의 키워드, 열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록

** 지난 2015년 1월,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에서 연 제2회 청소년활동가마당에서는, 청소년활동가들이 청소년운동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여 하나의 선언을 만들었다. 그 결과 나온 '2015 청소년활동가선언'은 현 시대 청소년활동가들이 청소년운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만들어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기에 이 책에 실는다.

2015 청소년활동가 선언

지금 우리의 청소년운동은 새로운 기로에 서있다. 청소년운동은 쌓인 경험과 기억, 그리고 더 깊어지고 다양해진 목소리와 실천을 바탕으로 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청소년운동의 새로운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등과 같은 새로운 과제와 마주하고 있기도 하다. 운동의 존속에만 급급하던 시대를 넘어, 이에 더해 발전과 변화 또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해방을 위한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청소년운동이 무엇이며 어디를 향해 있는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청소년운동 안팎으로 알리는 언어가 필요하다. 우리는 <2015 청소년활동가마당 - 여긴 어디? 나는 누구?>에 참여하여 청소년운동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자리를 마무리하며, 우리들은 각자의 소속 단체를 떠나서, 한 사람의 청소년활동가로서 청소년운동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우리의 청소년운동이 서있는 위치와 걸어갈 방향, 그리고 걸음걸이를 밝히고자 한다.

1. **(청소년운동의 목표)**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의 해방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이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억압, 차별, 폭력, 착취에 저항하며, 청소년들이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개인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평등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 **(청소년의 정의)**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은 사회에 의해 ‘미성년’이라고 구분되는 모든 사람들이다. 연령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제도적·관습적·문화적 구분의 기준이 청소년운동의 당사자를 결정한다. 그 범위는 대개 만18세~20세 미만이며, 경우에 따라 더 적은 나이나 더 많은 나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3. **(청소년의 성격)** 청소년은 소수자인 동시에 보편적인 집단이다. 현재 청소년인 사람은 사회적으로 억압과 차별을 받는 소수자의 위치에 있으나, 모든 청소년은 언젠가 청소년이 아니게 되며 모든 비청소년은 한때 청소년이었다. 또한 청소년은 청소년이라는 계급성을 가지지만, 그러면서도 속한 가족의 계급의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은 한마디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한 채 유예된 존재이다. 청소년운동은 단지 현재 청소년인 사람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투쟁할 뿐 아니라, 특정 연령의 사람들을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억압하는 현상과 사회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다.

4. **(청소년억압의 성격)** 이 사회에서 청소년은 국가와 자본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생각되며,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수단, 또는 미래를 준비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받는다. 청소년억압은 신체적·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을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맞춰 사회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사회에서 청소년억압의 대표적인 사회구조는 학교와 가족이다. 학교제도는 청소년이 자본주의적인 경쟁 및 차별 논리, 능력주의를 내면화하고, 권력에 복종하는 국민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다. 현 가족제도는 청소년을 친권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만들고 양육과 생존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계급을 재생산한다. 학교와 가족뿐만 아니라 비청소년 중심의 각종 제도와 문화 역시 청소년억압의 중요한 요소이다.

5. **(청소년 안의 다양성)** 청소년들은 단일한 존재들의 모임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계급, 성(性), 사상 및 이념, 신체적 상황, 그밖에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자 다른 억압을 경험한다. 청소년은 여러 차원의 중첩된 억압을 겪는 존재이다. 따라서 청소년운동은 다양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억압에 저항한다.

6. (청소년운동의 주체) 청소년운동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청소년 당사자이다. 청소년 당사자가 정치적인 힘을 가진 주체로 나서고 연대를 통해 집단적인 세력이 되는 것은 청소년해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소수의 엘리트나 ‘선한 어른들’이 청소년해방을 대신 이루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7. (청소년운동과 나이주의) 청소년운동은 ‘나이주의’에 반대한다. 나이주의는 연령에 따른 위계, 나이에 따른 차별 등의 문화와 제도를 가리킨다. 청소년들은 나이주의에 의해 사회 전반에서 차별과 억압을 겪기에 청소년운동은 나이주의를 극복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나이주의는 운동사회에도 존재하며, 그로 인해 청소년활동가들은 동등한 활동가로서 존중받지 못하기도 한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이 나이를 이유로 운동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현상에 문제의식을 갖는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들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활동가로서 존중받으며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문화를 지향한다.

8. (청소년운동의 정치성) 청소년운동은 정치적인 운동이다. 사회를 운영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정치이고, 따라서 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정치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겪는 일상적 억압과 차별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며, 이에 저항하는 청소년운동도 정치적인 운동이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주장하며, 정치적 활동이 청소년이 접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 반대한다.

9. (청소년운동의 독립성) 청소년운동은 다른 운동에 종속되지 않은 운동이다. 청소년 운동에 ‘배후’가 있다고 여기거나, 청소년활동가들이 다른 비청소년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자 거짓이다. 또한 청소년운동은 다른 사회운동의 ‘준비과정’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므로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는 당연한 것이지 특별하거나 대견한 일이 아니다.

10. (청소년운동의 고유성)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운동만의 문제의식과 고유한 영역을

가진다. 청소년억압은 다른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의 관점에 의한 정세 판단과 가치 기준, 우선순위를 갖고 활동한다.

11. (청소년운동의 연대성) 청소년해방은 인간해방과 분리되지 않는다. 청소년억압은 우리 사회의 각종 억압적인 구조와 제도,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운동은 우리 사회의 인간해방을 위해 함께 투쟁한다. 그리고 인간해방과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위해 청소년운동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청소년운동의 지향을 함께 선언하며,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모든 청소년의 해방을 향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와 단체에서 청소년운동을 하면서도, 해방을 위한 단결의 필요성을 잊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른 운동과 구별되는 고유한 청소년운동을 하면서도, 청소년해방은 전체 사회구조의 변혁과 함께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활동가이고, 우리의 옆에는 청소년해방을 함께 이루어낼 동료가 있다. 우리는 더욱 많은 청소년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2015년 1월 15일

※ 이름 뒤의 단체명은 참여자의 소속 단체를 참고삼아 알리기 위한 것이며, 해당 단체가 공식 입장으로 이 선언에 참여했다는 뜻이 아님을 밝힙니다.

검은빛(관악청소년연대여유), 공현(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들의모임·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난다(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텔라(관악청소년연대여유), 둠코(청소년활동기상청활기), 루블릿(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마카롱(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목성때지(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미쁨(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박씨(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별다(청소년활동기상청활기), 선우(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화야), 윤서(희망의우리학교), 이웅이, 자유(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들의모임), 주리(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준(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화야), 최준호(중고생연대), 치즈(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플린(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필부(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화야), 하루유키(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호야(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들의모임)

참고문헌

● 일제시대 소년운동 및 근현대의 청소년운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을 참고했다.

박철하,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30권, 독립기념관.

김정의, 《한국소년운동론》, 해안, 2006.

최명표, 《한국근대소년운동사》, 선인, 2011.

김성일, <'1회 어린이날 기념식'은 왜 두 번 치러졌나?> (<미디어스>, 2015.05.05.)

김현철 외, 《이팔청춘 꽃피는 어떻게 청소년이 되었나?》, 인물과사상사, 2009.

이주영, 《어린이 문화 운동사》, 보리, 2014.

● 1980년대~90년대 고등학생운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을 참고했다.

이수진, <고교학생운동 시론>

정승민, <「고등학생운동」의 역사적 출발과 그 진로>

임재환, <민족해방운동의 일주체로서 고등학생운동 시론>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 명동성당 농성 선언문>, 1987.

양돌규, 석사논문 <민주주의 이행기 고등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2006

손지희, <청소년 운동의 의의와 전망>, <진보교육> 33호, 2009

전누리, 석사논문, <고등학생운동 참여자의 사회진출에 관한 연구>, 2016.

<인권오름> 2호~54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연재, 2006~2007.

● 1990년대 후반 이후 2000년대 청소년운동에 대한 자료는 다음을 참고했다.

<청소년 대안공간으로서 사이버스페이스 활용 실태와 의미>김영지,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사이버유스>, 백영선 · 이민우, 《하자총서1 왜, 지금, 청소년? -하자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2002) 수록.

<10대가 세상을 바꾼다! -폭발하는 청소년의 '힙'으로 진보적 청소년 운동을 시작하자!!>, 정영진 (누니), 2000.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청소년 활동가 공동 선언문>, 2004.

〈진보적 청소년 연합 소개 글〉, 2004.

〈필요에 의한 단체 작은숲. 지금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박정훈, 작은숲 다음카페 글, 2003.

〈NEIS의 근본적 문제는 우리들의 정치적 권리에 있다〉. 박정훈, 작은숲 다음카페 글, 2003.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의 등장과 몰락 -2000~2001년 서울중고등학생연합을 중심으로〉, 이민승, 2005.

〈학생 인권 옹호와 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연합 S.U.R.E. (Students Union for Right and Education reform) 창설을 위한 선언 초안〉. 2000년 3월 1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기본원칙〉. 2007, 2012.

〈학교교육은 이기주의적 인간형을 양성한다 교육환경 바뀌지 않으면 학교다니기 싫다" - [긴급 좌담]우리가 고교 학생운동을 하는 이유〉, 유뉴스, 백영순 기자, 2002.

〈학생주체 교육개혁 선언문〉, 전고협 출범자료, 2002.

《오늘의 교육》 제20호~제27호, [인물로 만나는 청소년운동사] 연재, 2014~2015.

〈인권오름〉 2호~54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연재, 2006~2007.

● 현재의 청소년운동 전반에 관한 논의들은 다음을 참고했다.

배경내,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아동 : 아동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의 탐색〉, 《진보평론》, 2003.

공현, 〈청소년운동론 예고편〉, 《오늘의 교육》 13호, 2013.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ㅋㅋ》, 공현 외, 메이데이, 2009.

《인권, 교문을 넘다》, 인권교육센터 들 기획, 한겨레에듀, 2011.

〈전환기의 청소년운동〉, 공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54호, 2012.

〈(좌담) 청소년 활동가들의 운동 안팎을 향한 투쟁〉, 한날,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54호, 2012.

〈2015 청소년활동가 선언〉, 2015.

〈군사주의의 다양한 얼굴들〉, 이용석(전쟁없는 세상), 문화연대 뉴스레터 문화빵 28호, 2013.

청소년운동 우물모임 지음

2016년 11월 3일 발행

이 소책자는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의 '그 맘 알아요'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